

다산 인권

제43호

2001. 11. 7.(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박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인터넷 내용등급제 결사 항전’

폐지 요구... 1인 릴레이 단식 이어져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1일 결사항전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즉각적인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22일부터는 공동행동의 활동가와 각계 인사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폐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요구를 걸고, 60일간 명동성당에서 릴레이 철야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관료들이 오로지 '통제'에만 집착해서 만들어낸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정통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에만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공동행동은 <등급의 표시방법인 피스(PIC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짝이 되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등급제의 실체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깔리게 되면서 발생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인터넷 접근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점,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작하여 시범배포하고 픽스용 차단소프트웨어에 따르면 등급을 달지 않은 미등급 홈페이지 역시 기본적(default)으로 차단되는 것이라면, <청소년에게 유해함> 혹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 이라는 등급을 달아야만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등급을 모든 사이트에 매기는 것과 같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터넷등급제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불복종만이 유일하게 남은 길이며,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 표시를 거부할 것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 소프트웨어를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다산**

하반기 전민중 투쟁 본격화 예고

하반기 본격적인 민중투쟁이 전개되면서 경기지역에서도 생존권 투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2일故이남원 농민 추모 및 쌀값 보장을 위한 경기농민대회가 안성시민회관에서 있었고, 같은 날 농협 경기본부 후문에서는 농개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및 쌀값보장 농협노조 경인본부 결의대회가 있었다.

또한 같은 날 연천군 공설운동장에서는 쌀값보장을 위한 연천군 농민대회가 있었으며, 지난 11/4 보라매공원에서는 경기지역 공무원교사 결의대회가 진행 되었다.

노동자들은 11월 송실대에서 노동자대회 전야제와 11일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반기 투쟁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뒤를 이어 12월 2일에는 전민중이 함께하는 전국민중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하반기 전민중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다산**

심시장, 업무복귀 앞서 수원시민에게 사과하라. 수원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지난 5일인 월요일 <2면에서 이어짐>



제6회수원인권영화제

일정 : 11월 15일(목),17(토) 오전10시 ~ 오후10시 /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11월 16일(금) 오후1시 ~ 새벽 4시 / 다산인권센터 소극장

날짜	시작	종영	상영작품
15일(목)	10:00	11:00	팬지와담쟁이(60m)
	11:10	11:22	아름답고방자한자궁(12m)
	11:30	11:37	For the Peace of All(7m)
	11:45	12:25	나는날마다내일을꿈꾼다(40m)
	12:40	1:19	골프전쟁(39m)
	1:30	1:58	죽음의포옹(28m)
	2:10	2:20	내컴퓨터(10m)
	2:30	4:00	4월 9일(90m)
	4:10	5:36	버스승객조합(86m)
	5:40	5:52	셀리의애교점(12m)
16일(금)	6:00	7:35	1991년1학년(95m)
	7:40	8:30	개막식
	8:40	10:10	매항리로 돌아가는 먼길(90m)/감독과의대화
	1:00	1:46	흑인여성으로 태어나(46m)
	1:50	2:30	먼지의 집(50m)
	2:40	2:56	바르도(16m)
	2:56	3:08	이발소이씨(12m)
	3:08	3:30	남정순엄마누리줄마(22m)
	3:40	4:28	민주주의로서의저항(48m)
	4:35	5:21	나는행복하다(46m)
17일(토)	5:30	6:30	팬지와담쟁이(60m)
	6:40	6:55	구타유발자...잠들다(15m)
	6:55	7:07	아름답고방자한자궁(12m)
	7:07	7:14	For the Peace of All(7m)
	7:15	7:30	미키마우스아이티에가다(15m)
	7:40	10:00	옥천전투(98m)/감독과의 대화
	10:10	11:00	한사람(50m)
	12:00	4:40	칠레전투(264m)
	10:00	11:12	이것이민주주의(72m)
	11:20	12:20	싸빠띠스따(60m)
12:30	1:10	나는날마다내일을꿈꾼다(40m)	
1:20	1:43	슈가힐(23m)	
1:43	1:53	내컴퓨터(10m)	
1:53	2:10	1979년10월28일 일요일맑음(17m)	
2:10	2:26	바르도(16m)	
2:30	4:05	1991년 1학년(95m)	
4:10	5:08	재희이야기(58m)	
5:10	5:38	죽음의 포옹(28m)	
5:40	6:19	골프전쟁(39m)	
6:25	7:15	주민등록증을잊어라(50m)	
7:20	8:50	애국가게임(90m)	
8:50	9:30	폐막식	

상영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31-213-2105
홈페이지 : www.rights.or.kr

-1면에서 이어짐> 수원시청 앞에서는 심재덕 수원시장의 업무복귀에 항의하는 시민단체와 공무원들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심시장은 지난 3월 12일 N주택과 S건설로부터의 2억3천만원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다.

지난 7월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백춘기부장판사)는 심시장을 N주택으로부터 뇌물 2억을 수수한 혐의와 S건설로부터 뇌물 3천만원을 수수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3천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심시장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며, 지난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구옥서 부장판사)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11월 5일부터 업무복귀예정인 심시장에 대하여 다산인권센터, 민예총수원지부, 수원경찰서, 수원여성회는 5일 아침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원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였다.

당일은 심시장이 보석결정 이후 처음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날이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시장 본인의 수리여부와는 상관없이 시장의 최측근 인사들의 뇌물수수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100만 수원시민들에게는 어떠한 변명도 소용없다'며 이번 일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심시장은 업무복귀에 앞서 100만 수원시민에게 사과해야하고,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등 관련 법규를 즉각 개정해야한다.'고 밝히며 한편으로는 '정부가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주민소송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심시장 업무복귀에 따른 우려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실현의 대안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다산**

다산 인권

제44호 (영화제 특집호)

2001. 11. 14.(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박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시민사회단체 전국적 규모의

"(가칭)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구성에 돌입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중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달 6일(화) 미국의 보복전쟁,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및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반대를 위한 "(가칭)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을 구성하였다.

"(가칭)공동실천"은 전쟁으로 인한 인간파괴와 존엄성 상실을 몸소 겪은 유일한 분단국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어느 국가보다도 반전평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며 개인, 전국적인 시민사회단체가 반전평화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30일 방문한 평화학의 창시자 격인 요한갈통교수는 "지난 테러사건은 가난한 나라들과 백성들에 대해 휘둘렀던 미국의 경제적 황포와 무방비의 양민들을 살육해 온 미국의 군사적 전횡 그리고 힘없는자들의 숨통을 죄는 미국의 정치권력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다며 그간 진행된 미국의 패권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가칭)공동실천"은 반전평화운동을 제안하며 "지금 미국은 겨울전 텔레비전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미국정부의 미사일 공습과 지상군투입이 시작되면서 사상자만도 약 천여명(텔레비전추주장), 난민 7백50만명에 이르고있는 현실이며, 한국정부는 미국의 전쟁규모와 방식이 결정되기도 전에 전쟁지원

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약속을 하는 등 중속적인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가칭)공동실천"은 지난달 3차례에 실무자회의를 진행하여 전국적 규모의 공동실천사업으로 △미국의 보복전쟁, 한국정부의 전쟁지원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전쟁으로 인한 아

프칸난민지원을 위한 모금운동 △전쟁 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집회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13일(화) 실무자 회의를 통해 다음달 15일(토) 대학로에서 전국동시다발집회를 계획했으며, 반제평화운동과 아프칸난민돕기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박진**

'교수도 노동자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출범

지난 10일 전국의 교수 100여명은 서울대학교 인문대 앞마당에 모여 '전국교수노동조합' 출범식을 가졌다. 전국113개 대학, 1004명의 교수가 발기인으로 참가한 교수노조는 이날 전국에서 모인 8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의원대회를 갖고 임원선출, 강령 및 규약,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정식노조로 출범을 하였다. 이날 교수노조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상의 서울대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특권의 식속에서 안주하며 자신의 영달을 꾀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이제 대학개혁의 원동력이 되겠다'며 '교수도 노동자다'라는 노동자 선언을 하였다. 교수노조는 지난 4월 14일 '전국교수노동조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민주적 대학운영 구조의 확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여왔다.

한편, 지난 5·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수노조 출범을 앞두고 전국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 총·학장앞으로 '교수노조 결성 움직임과 관련한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하달해 물의를 빚었다. 위 공문에는 불법적인 교수노조 결성 움직임에 대해 총·학장의 적극적인 대처와 사전예방을 위한 능동적인 역할을 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학교수의 직위가 스스로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원에게 허용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조차 인정 할 수 없다며 교수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준)은 규탄성명을 통해 "대학위에 군림하려는 교육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교수의 노동자성'과 관련한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살얼음 돋는 한복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하나
당신을 만나러 간다.

- 일정 11월 15일(목) - 17일(토)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 16일(금) 심야상영 '칠레전투' 다산인권센터 소극장
- 연락처 031-213-2105 (017-268-0136) ● 홈페이지 www.rights.or.kr

section 1 평화.....

너무 오래되었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왜 이리 먼가요.

상채기만 남아 폐허가 된 마을, 아줌마는 고추 배를 가르며 묻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우리나라 도와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미국 물러나라 하던.. 배은망덕한거잖아. 그런데 그 공으로... 50년 동안 썩어졌으면 된 거 아니여..."

- 개막작 매향리로 돌아가는 먼길 <고안원석 2001 다큐 DV (6,8mm) 90분 color 한국>
-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이석훈 1999 극 VHS 6분 40초 color 한국>
- 특별상영 264분 '칠레전투' <1978 다큐 VHS 264분 칠레> *금요일 자정부터 다산인권센터 소극장에서 별도상영

section 2 반세계화 · 신자유주의의 음모

삶이 살기 위한 전쟁이라면, 배고픔은 전쟁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너무 가난한 것은, 너무 배고픈 것은 전쟁에 나가 죽는 것 보다도 힘겨운 일이지요. 매일의 삶이 살기 위한 전쟁이라면 말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20%의 부자들과 아이티노동자들 한달 임금보다 수 백 배는 비싼 미키마우스 티셔츠를 입고 사는 미국 사람들. 그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부도덕합니다.

퀴즈 하나! 포 닥터 식민지가 시작 된다... 세계화가 미국의 신세계주의와 무엇이 다른지 찾아내는 분들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 미키마우스 아이티에 가다 <1997 다큐 VHS 15분 color 미국 크라이링 루스터즈 프로덕션>
- 골프전쟁 <1999 다큐 VHS 39분 color 미국>
- 민주주의로서의 저항 <2000 다큐 VHS 48분 color 미국>
- 죽음의 포옹 <1999 다큐 VHS 28분 color 미국>
- 싸빠띠스파 <1999 다큐 VHS 60분 color 미국>
- 이것이 민주주의! (시애틀투쟁3부작 연작 중) <2000 다큐 VHS 72분 color 미국>
- 먼지의 집 <1999 다큐 VHS 50분 color 한국>
- 버스승객조합 <2000 다큐 VHS 86분 color 미국>

section 3 소수자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죠?

자신과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사람들, 편견으로 상처받는 영혼들에게 따뜻한 햇빛으로 다가갑니다. 햇빛은 때로 남은 상처를 치유하기 이전에 자신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상은 한 뼘쯤 살기 좋은 쪽으로 바뀐답니다.

- 샬리의 애교점 <1990 극 VHS 12분 b&w/color 한국>
- 이발소이씨 <권종관 2000 극 VHS 22분 color 한국>
- 슈가힐 <이송희일 2000 극 VHS 23분 color 한국>
- 팬지와 담쟁이 <계운경 2000 DV 6mm 60분 한국>
- 나는 행복하다 <류미례 2000년 VHS 46분 한국 푸른영상>

section 4 여성

세상의 모든 딸들, 아름답고 방자하게..

엄마와는 다르게 살고 싶은 것이 딸들의 소망입니다. 엄마의 삶이랑게 희생과 침묵과 순종이라는 인간의 덕목들로 채워져 있던데 왜, 딸들은 다르게 살고 싶은가요? 때로 희생은 미덕도 덕목도 아니라는 것을 오랫동안 강요당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아는 까닭이겠지요. 그녀들의 연대의 춤을 보십시오. 아름답게 방자하게 추고 있습니다.

- 흑인여성으로 태어나 <2000 다큐 VHS 44 분 color 브라질 & 미국>
- 남정순,엄마누라춤 <신현경 2000 VHS 22분 color 한국>
- 재회이야기<2000 극 VHS 50분 color 한국>
- 나는 날마다 내일을 꿈꾼다 <2000 다큐 VHS 40분 color 한국>
- 아름답고 방자한 자궁 <2000 다큐 VHS 12분 color 한국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그룹 '입김'>

section 5 내부의 적

나는 2% 부족.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세상을 죽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았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한 2%, 내 안에 살고 있는 적들에게 나는 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 1979년 10월 28일 일요일 맑음 <권중관 1999 극 VHS 17분 흑백>
- 바르도 <윤영호 2000 극 VHS color 16분 한국>
- 구타유발자...잠들다 <유정현 2000 극 VHS 16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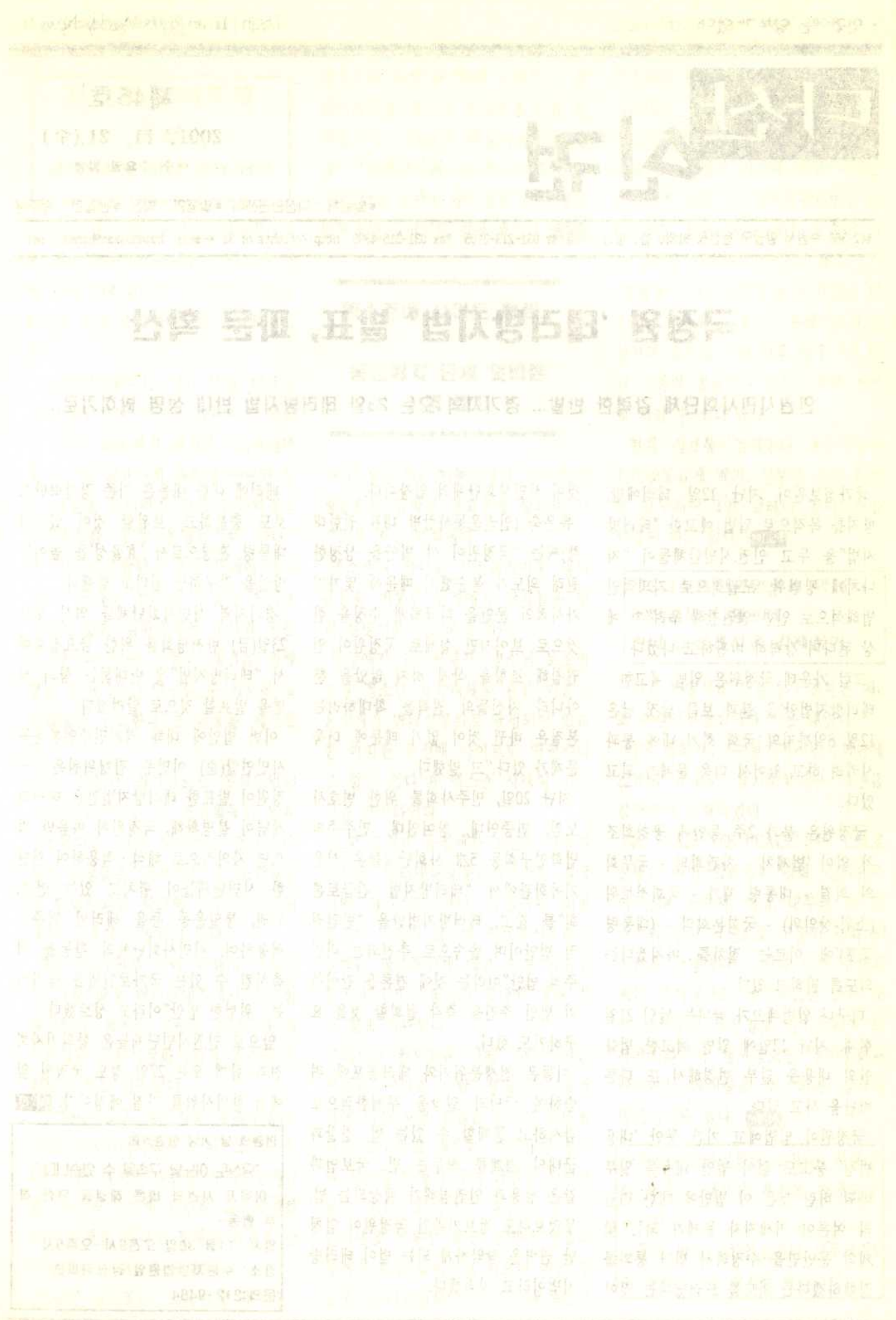
section 6 민주주의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자와 잃을 것이 많은 자들은 한결같은 소리를 낸다는군요. '바이러스는 무한자기복제, 분열, 증식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갖는다.'

- 한사람 <2001 다큐 VHS 50분 color 한국>
- 4월9일 <김태일 2000 다큐 VHS 125분 color 한국>
- 내컴퓨터 <여균동 1999 극 VHS 10분 color 한국>
- 1991년 1학년 <김환태 2001 다큐 VHS 95분 color 한국>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이마리오 2001 다큐 VHS 50분 color 한국>
- 옥천 전투<황철민 2001 다큐 VHS 90분 color 한국>
- 폐막작 '애국가게임' <빨간눈사람 2001 다큐 DV 6mm 90분 color 한국>

전쟁을 반대하며...

제6회 수원영화제는 아프카니스탄의 보복전쟁을 반대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되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파괴는 결국 파괴를 낳는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인권의 목소리이며,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전세계 소수자의 외침입니다.
 이번 영화제의 정신이 " NO WAR! YES PEACE!"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킵니다. 무고한 아이의 생명을 전쟁의 실리와 명분에 내줄 수 없습니다.



다산인권

제45호

2001. 11. 21.(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박진 ●편집인 : 송주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국정원 '테러방지법' 발표, 파문 확산

인권시민사회단체 강력한 반발... 경기지역 오는 23일 테러방지법 반대 성명 밝히기로..

국가정보원이 지난 12일 테러예방, 방지를 목적으로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을 두고 인권·시민단체들이 "지나치게 광범위, 포괄적으로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예상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런 가운데 국정원은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을 불과 보름 남짓 남은 12월 8일까지의 국회 회기 내에 통과 시키려 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정원은 불과 2주 동안에 공청회조차 없이 '법제처 - 차관회의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 - 국회정보위(소위-상임위) - 국회본회의 - (대통령 공포)'에 이르는 절차를 마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더구나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인 21일 현재, 지난 12일에 입법 예고한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또 다른 비난을 사고 있다.

국정원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내용 변경' 통고도 없이 법안 내용을 일부 바꿔 버린 것은 이 법안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자 문제가 되는 몇 개의 문안만을 수정해서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이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다.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권한대행)씨는 "국정원이 이 법안을 상정한 원래 의도가 불순했기 때문에 몇가지 가시적인 문안을 다급하게 수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국정원이 인권침해 조항을 삭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려는 본질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등 5개 사회단체들은 서울 기독교관에서 "테러방지법 긴급토론회"를 갖고, 테러방지법안을 "반인권적 법안이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비민주적 법안"이라는 것에 결론을 같이하며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쟁분위기와 테러공포에 편승하여 국민의 일상을 무제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 경찰과 군대의 경계를 허무는 법, 국보법과 같은 남용과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법, 무엇보다도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엄청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법이 테러방지법이라고 지적했다.

테러에 대한 대응은 기존 경찰력만으로도 충분하고, 보완할 것이 있다면 대통령 훈령으로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오는 23일(금) 반전평화를 위한 금요일집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항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에 대해 경기민주연론운동 시민연합(준) 이민우 집행위원은 "국정원이 발표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의 개념이 불명확해,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웬만한 시민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언론, 인권, 통일운동 등을 테러의 범주로 적용하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능가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앞으로 인권시민단체들은 항의기자회견과 함께 오는 27일 정오 국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다산**

인권의 날 기념 인권카페

"당신도 어느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목자 사건의 바른 해결을 위한 하루 행동-

일시: 11월 30일 오전9시-오후5시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삼정커피숍

문의: 212-9484

전교조 총력투쟁

유보

교육시장화 저지 과제 남아

전교조는 19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미흡하나마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로 하고 총파업투쟁을 유보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9일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던 △7차 교육과정 관련은 "교과선택제 등 7차 교육과정 개선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다."는 것과 △조합활동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은 수업과 학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수 방법의 개선을 위해 방과 후 월2시간 연수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던 교사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일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선 교장들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합법화되면 학교의 혼란이 야기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안에 대해서 전교조는 11월 말경 대의원대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교조가 제기하였던 교육시장화저지의 문제는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선용(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이번 교육인적자원부 안이 소중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수준별 수업, 성과급제, 계약제 교사와 관련한 교육시장화저지 투쟁은 아직도 투쟁의 과제로 남아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육시장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조퇴투쟁, 집단연가투쟁, 성과급 반납투쟁 등을 전개했으며, 지난4일 비상대의원대회를 열고 "단협승리와 교육평등권 확보"를 위해 11월 조합원 총투표를 거친 총파업투쟁에 나서기로 결의 했었다. **다산**

엑스존에 사이트 폐쇄...

동성애자 단체 잇따른 성명 발표

지난 9일 엑스존(동성애자 사이트)이 정통윤의 협박성 경고문에 항의해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엑스존의 사이트 자진폐쇄이후 네티즌들을 비롯한 동성애자 단체들은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단 기준에 동성애가 변태성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한 어떠한 동성애 사이트도 안전하다고 할수 없다'며 엑스존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고려대 동성애자 모임인 사람과 사람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결국 어떤 서비스도 아닌, 공권력에 의한 검열에 지나지 않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에 대한 깡패 집단일 뿐이다'라며 정통윤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리모트 컨트롤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사람과 사람' 성명서는 '공권력에 의한 사전 검열은 헌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러가지 장치와 체계를 만들어 내어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영역인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영역에 검열과 통제의 칼을 들이밀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서

비스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그 실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청소년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이 자리 잡고 있다.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상호 모순이 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통윤이 엑스존에게 보낸 경고문 내용은 '유해문구 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였다.

현재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철야단식을 31일째 하고 있다. **다산**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막내려

조선일보의 횡포에

안티 조선게시물 강제철거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가 막을 내렸다. 이번 영화제는 수원지역시민사회단체 22개의 주최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NO WAR! YES PEACE!라는 모토로 진행된 이번 영화제는 평화, 신자유주의 반대, 소수자, 여성, 내부의 적, 민주주의 등의 섹션으로 구분된 영화 30여편을 상영했다. 그러나 이번 영화제에는 부대행사로 설치되었던 안티 조선 게시물을 조선일보 경기총판이 문제제기하면서 행사장소인 경기문화재단측에서 게시물을 철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산**

송원찬(다산인권센터 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동안 박진(다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권한대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다산인권

제46호
2001. 11. 28.(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박진 ●편집인: 송주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국가인권위원회 당분간 파행운영 계속될듯

관계부처 등의 몰이해, 비협조로 조직구성 조차 못해

지난 26일(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인권위에 대한 이해부족, 비협조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인권위와 관계부처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는, 인권위조직 규모, 구급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위조사권, 인권활동가 특별채용문제 등을 주요하게 들 수 있다.

▷ 인권위 조직규모에 대해, 인권위는 행정자치부의 마찰로 수정안(애초439명을 제안)으로 321명을 제안했으나, 행정자치부는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이른바 "작은정부"을 내세워 127명으로 제한했다.

▷ 구급시설에 대한 인권위 조사권에 대해 법무부는 기존의 입법례 등에 비춰 사전통보를 조건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전통보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 정확한 사실조사의 곤란함을 들어 조건 없는 사실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 인권활동가 특별채용에 대해서, 중앙인사위원회는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고 공무원인사의 기본원칙에 반함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인권위의 실무자는 "인권위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 인권영역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의 채용이야말로 향후 인권위,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인권위의 난항은, 비단 출발과 함께 불거졌다기 보다는, 지난 시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인권위원선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론화나 수렴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이끌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만도 약 230여건(28일)에 이르며, 지금 인권위는 위원장(김창국)을 비롯해 3명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설립기획단 27명만으로 구성되어서 진정사건 접수만도 벅찬 실정이다.

최영에 인권위 사무처 준비단장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구제에 인권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이 인권위에 대한 몰이해, 편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다. **다산**

언론을 비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언론운동이다.

오는 12월 1일(토) 경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발기인대회 예정

'언론을 시민의 것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경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이 오는 1일(토) 오후5시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에서 발기인대회를 갖는다.

경기민언련은 지역 내 바른 언론관의 정립과 확산, 지역언론 감시를 통한 대안매체화, 사이버언론 퇴치, 언론의 소유집중 분산, 참언론인의 양성, 대안매체의 설립, 민주적, 공동체적 삶의 가치 확산 등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동안 경기민언련은 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수원통일한마당, 수원인권영화제 등의 행사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앞으로 ▲ 제도지 폐지운동 ▲ 기사실 폐지운동 ▲ 조선일보 반대 사업 ▲ 시민, 학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차미경 (국제민주연대 정책위원)

11월이 가기 전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본 문화와 음악이 어우러진 행사 중 가장 아름다운 음악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은 지리산 자락 맑은 바람 속을 뒹굴며 공부하던 간디학교의 아이들과 8개월째 월급도 못받으며 학교 살리기 운동에 나선 선생님들이었다. 행사장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입장료를 받는 창구가 없었다. 음악회가 열리는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강당의 로비는 어디서 다 알고 왔는지 수백명의 청소년들과 어른들로 시끌벅적했다. 이미 좌석은 꽉 찬 상태였다. 놀라웠다. '작은 대안학교 하나를 살리자는 이런 행사가 과연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그것도 평일 날에..' 부질없는 걱정이었다. 티켓을 팔지 않은 이유도 나중에 알았다. 주최측은 자율이 강제되어 학교가 문닫게 된 상황을 거부했듯이 누구에게도 이 음악회를 강요하지 않았다. 학교 살리기 운동을 위한 후원금을 받는 종이 박스 하나만 준비했다. 후원금을 넣는 봉투도 없었다.

프로그램 1-2부에서 아이들은 직접 만든 학교 소개 영상물, 슬라이드 쇼, 퍼포먼스, 풍물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맘껏 드러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키워가는 작은 꿈을 어른들은 왜 포기하라고 하고, 교육청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생님들의 월급을 왜 끊어버렸나고."

아이들은 정말 간디 학교를 사랑했다. 직접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자연을 지키기 위해 공해물질을 쓰지 않는 연습을 하고, 별명으로 선생님을 부르며 함께 만들어 가는 수업을 즐겼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 포장된 거창한 꿈보다는 배움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간디학교는 '죽은 학교'가 아니다. 간디의 아이들은 박제화된 '자유'와 '인권'의 언어가 나열된 교과서와 경쟁을 강요하는 학교를 거부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철학 속에서 나의 인권과 다른 사람의 인권이 다르지 않음을 스스로 알아가며 인격의 자양분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한 선생님들의 교육 신념과 다양성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이제라도 경남 교육청은 받아 들여야 한다. 간디중학교를 해산시키려는 교육청의 처사는 청소년의 인권과 꿈을 짓밟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권위'에 절망하고 좌절을 겪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며칠 후면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정부는 인권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창한 1회용 행사보다 곳곳에서 인권이 소외되고 짓밟힌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부디 고민하고 결단하길 바란다. 나아가 간디학교 처럼 인권의 소중함을 키워 가는 소중한 노력들을 짓밟는 교육행정의 처사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빨리 간디중학교 해산방침의 철회를 전하는 소식을 경남산청의 아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웃음을 되 찾은 게 가장 보람 있었어요!

매원초등학교에서 작은전시회

지난 3일간(26, 27, 28) 매원초등학교에서는, 작년부터 수원여성회가 저소득층 자녀를 상대로 한 방과후 어린이 교실의 일환으로 "방과후 어린이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작년부터 수원여성회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를 상대로 글쓰기, 표현활동, 공동체놀이, 택견배우기, 학습활동, 모듬활동 등 다양한 방과후 교실을 진행해왔다.

방과후 교사 이정미(수원여성회 소속)씨는 "재정의 부족으로 간식비, 학습도구 구입 등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동안 어두웠던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과 자신감을 되찾은 게 가장 좋았다"라며 그간의 어려움을 뒤로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달 토론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나, 어느 정도 재정적 뒷받침이 된다면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원지역에는 수원여성회 이외에 시민단체들이 직접 운영하는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로 샘골마당의 방과후학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반전평화를 위한 금요집회

11월 30일(금) 오후3시
수원 남문 중앙극장앞

다산인권

제47호

2001. 12. 5.(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박진 ●편집인 : 송주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hanmail.net

경찰, 12월 2일 전국민중연대 집회에서 폭력진압 물의

민주노총, 노동파업 농민시위 강경대응은 '끓는 기름에 불지르기' 성명 발표

지난 2일 개최된 전국민중대회에서 위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지나친 폭력을 휘둘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집회는 2만여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참여해서 'WTO 쌀수입 반대·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민중 생존권쟁취 김대중 정권반대·반전 평화 미국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학로와 종로 등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경찰은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던 집회 참가자들을 무장한 경찰부대를 동원, 무차별한 폭력을 휘둘러서 상당수가 다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되는 무장 경찰부대는 서울시경 소속 1001-1003 부대이며, 이들은 지난 롯데호텔 진압, 대우자동차 조합원 폭력 사건, 레미콘 노동자 시위해산, 전농 집회 당시에도 집회참가자들을 폭행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집회 도중 경북 의성군 농민회에서 올라온 양모씨는 위 부대의 진압이후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현재 위중한 상태이며 방송사 비정규직 주봉주 위원장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 3명이 병원에 실려 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역시 진압과정에서 의경이

실명위기에 놓이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발표했다.

이날 집회현장을 촬영한 참세상 뉴스팀은 "1001~3 중대, 머리와 목만 노린다."는 제목으로 위 부대들의 진압과정을 동영상으로 취재해서 방송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늘 5일(수) 성명서를 발표,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 당국이 잇따라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는 단체교섭 대표들인 사회보

명의 검거와 지난 2일 전국민중대회에서 경찰과 집회참가자 간에 폭력적 진압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 등 모두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추가구속과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법정 구속 등 현 정부의 심각한 노동탄압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는데, 경찰은 최근 교섭 중이던 노조 간부들을 체포영장을 들고 검거에 나서 노사 대화 자체를 막질 않나,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철도, 가스 등 기간 산업 사유화를 반대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 -2면에서 계속-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곳,
알럼! 휴먼라이트! 청소년인권평화학교



알럼휴먼라이트는 인권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어름다운 나, 포털로 놀기, 얼얼은 고실보그 악어의강 건너기,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학생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 ▶2001년 12월 8일, 15일(토요일)
- ▶다산인권센터 회의실
- ▶경기북지사민연대(문의:031-215-4395),다산인권센터,전교조수원중등지회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와 정통부장관퇴진 위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무기한 단식농성 9일째

-1면에서 이어짐- 하겠다고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의 이런 태도는 분노의 기름에 불을 지르는 일과 같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가 노동, 농업정책의 변화 없이 강경 대응만을 고수했을 경우 노동계를 비롯한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산**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나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아프간 파병 통과, 비난 줄이어...

지난 11월 30일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대테러전쟁 지원을 위한 500명 규모의 비전투병 해외파병을 내용으로 하며 국군부대 파견에 따른 경비는 우리측이 부담하고, 소요 예산으로는 올해 147억6천만원, 2002년 440억원(이상 잠정)이 각각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전쟁반대 평화 실현 공동실천'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참여단체의 회원60명이 국회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오늘 5일(수) 6·15 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역시 성명서를 발표, '정부의 한국군 파병결정 국회통과는 또 다른 테러인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며 미국의 다음 전쟁대상이 될 수 있는 이북에 대한 위협행위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 법안은 오는 12월 7일(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다산**

지난 11월 27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앞에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와 정통부장관 퇴진'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9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아래 정부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한 이래, 동성애자 커뮤니티 사이트인 '엑스존'이 정통부의 협박아래 자진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등 시민단체 활동가 및 각계인사들은 10월 22일부터 60일간 명동성당 릴레이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철야단식 농성은 5일(목) 현재 45일째를 맞고 있으며 이창수 대표는 단식농성 9일째를 맞고 있다.

이창수 대표는 영하의 날씨와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어 체력저하가 급격하여 건강상 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식농성에 대한 각 단체들의 지지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반인권적 일뿐만 아니라 그 기준 또한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법적 강제력까지 지니고 있어 현 정부의 인권의식을 현저히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인권수호를 위한 강고한 실천과 투쟁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고 하면서, '정부와 정통부는 즉각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주무부서인 정통부 장관에 그 책

임을 물어,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정보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라며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와 정통부 장관 퇴진을 강력히 주장했다. **다산**

이주노동자지원단체 공동발간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백서' 출판기념회 가져...

오는 6일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는 공동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기독교회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외노협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제도적 문제점을 낱알이 밝히고 올바른 외국인 이주노동자 제도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인권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인권백서는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현장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 접수된 이주 노동자에 가해진 인권유린 사례 100여 개가 15개의 큰 분류로 해설과 함께 실려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과 이주 노동자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활동가들이 필진이 되어 구성된 이번 백서는 현장속에서 느끼는 생생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 **다산**

반전평화를 위한 금요일집회

12월 7일(금) 오후3시
수원 남문 중앙극장 앞

다산 인권

제48호

2001. 12. 12.(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박진 ●편집인 : 송주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전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dasan@hanmail.net

우리는 파병 동의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주목하겠다.

12월 11일 아프간 파병동의안 통과 항의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려

지난 6일(목) 아프간 파병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이날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방부는 의료지원단 및 수송단 파병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20일경 파병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를 항의하는 집회 및 시위가 거센 가운데 수원·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 53주년을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어, 파병동의안 통과에 강력히 항의했다.

기자회견은 그동안 진행된 경기 수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전평화 집회 경과 보고와 항의 성명서 낭독으로 이어졌다.

성명서는 "세계의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번 전쟁의 본질을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음모이며, 이보다 더 명분 없는 전쟁은 없다는 소리를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미국의 주문에 맥없이 추종하는 사대적인 자세로 우리를 실망시켰다. 여야의 정치인들은 한국 젊은이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겠다는 동의안에 만장일치로 답변했

다."면서 강한 비난의 어조로 시작되었다.

특히, 성명서는 지난 시절 베트남 전쟁 당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하에서도 파병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기권이나 반대표를 행사했던것에 비해, 이번 파병동의안이 참석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것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표현을 했다.

기자회견을 준비한 다산인권센터 박진 사무국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이번 파병동의안에 참석한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을 기대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는 15일에는 반전평화공동실천의 주축로 "2001 반전평화대행진 - 전쟁의 골짜기를 넘어 평화의 바다로"가 열려 지난 9월 이후 진행된 국내의 반전평화운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국 사회 반전평화지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있다.

장소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또는 동대문운동장으로 예정되어있으며, 전쟁과 평화가 갈등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를 색깔 천 10여개로 상징하고, 그 위에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평화의 배를 밀고 평화 대행진을 벌일 예

정이다. **박진**

'군 의문사 여전히 국가책임 없음' 판결

지난 99년 4월 6일 수원경비교도대에서 사망한 이지상씨에 대하여 부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3부(재판장 전수안)는 원고(항소인) 기각 판결을 했다.

이지상씨는 98년 7월 2일 군에 입대하여 98년 9월 5일 수원경비교도대로 전입하여 군 생활을 하던 와중에 상급자들로부터 일차려 등 구타와 협박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원심법원(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재판장 성백현)은 구타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가 없고, 설사 구타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타가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었다.

이번 항소심 재판 중 증인신문 과정에서 같은 내무반에 있던 송모씨가 당시 이지상씨에 대한 구타사실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판결되었다.

"전반적인 인권수준 침체" 김대중 정부 들어 양심수 현저히 증가 세계인권선언 53주년 성명서, 행사 줄이어...

아직도 군대 내 의문사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판결은 국가가 아직도 군의 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건을 담당한 김철준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당시 같은 내무반 동료 부대원들이 양심 선언하듯이 경비교도대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히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특히, 구치소라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특수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실인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재판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박진**

중증원 자격은 남자만의 것! '헌법. 국제조약에도 어긋나는 구시대적 발상'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이원재씨 등 용인이씨 사능공과 출가여성 5명이 중증을 상대로 한 '중회 회원 확인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증원을 20세이상 성인남자로 정하고 있는것에 대해 헌법상 남녀평등에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민법의 일반원칙인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경(수원가정법률상담소 사무국장) 씨는 "헌법상 보장된 양성평등의 원칙이나, 84년에 가입한 국제조약(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도 어긋나는 구시대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진**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 53주년을 맞이하여 각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행사를 열어, 우리사회 인권현실을 다각도로 전망했다.

전북평화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 이하 인권연대)는 세계인권선언 53주년을 맞이하여, "2001전북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인권연대는 선언문에서 △ 김대중 정권이 약속했던 국가보안법 개폐는 단 한줄도 개정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구속자만 증가했으며 △ 7차 교육과정은 학습권, 자율권 침해, 학교의 서열화, 전문성 하락 등으로 교육의 질을 하락 시켰고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 농민들의 저항이 전례없이 강도를 높였으며, 사회전반에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낳았고 지적했다.

또한 불평등한 SOFA(주둔군지위협정), 집시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촉구했으며, 장애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킬 것을 주장했다.

인권연대는 "이번 2001전북인권선언을 통해 인권의 지평이 넓어지고 부와 권력에 의한 여러 인권침해에 대해 평가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서울 교동초등학교에서 인권수업을 진행했으며, "인권위 출범 2주,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사람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 정책

과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아울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8일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인권세미나'를 가졌으며, 엠네스티 수원33그룹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수원만석공원에 수원미술관에서 '인권미술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수원 인계동의 나혜석 거리에서 캠페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신고

최저임금은 시간급 2,100원, 일급(8시간 기준) 16,800원, 월급(226시간 기준) 474,600원입니다.

본인의 월급 명세서에서 상여금, 정근수당,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숙직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한 금액이 월 47만4천600원에 미달할 경우 법정최저임금보다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 및 신고처>

민주노총 수원 ▲031-225-9484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수원의국인노동자센터 ▲031-228-2789

수원경찰서 ▲031-253-2268
* 수원.용인.오산.화성지역
최저임금위반사업장 공동감시단

다산 인권

제49호

2001. 12. 19.(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박진 ●편집인 : 송주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한겨울에 쫓거나 천막농성하는 노동자들

안산 소재 대성산소용역노조 52일째 농성, 용인 소재 세원바이켄 노조 폐업 134일째

지난 12월 13일 영하 10시경 영하 5도의 날씨속에서 법원 집달관 80여명과 용역40명에 의해 회사안에서 농성중이던 세원바이켄 노조 조합원 7명은 강제로 회사밖으로 쫓겨났다.

현재 이들은 회사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38명의 조합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농성 7일째를 맞고 있으며 회사 안에는 용역 40여명이 상주하면서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세원바이켄은 일방적으로 8월 8일 회사 해산결의를 하고 그 다음날 폐업공고를 했다.

회사는 8월 30일 집행부와 조합원 9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에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으며 11월 30일 수원지방법원 민사 제30부(이호원 부장판사)는 회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조합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린바 있다.

지난 11월 7일 수원지방법노동사무소에서 노사 만남의 자리에서 회사는 '주1회 실무협의, 필요시 사장은 노조위원장을 만나겠다'라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를 있었지만 해결의지는 없이 '법대로 해라'라는 말

만 되풀이하면서 조합원들을 영하의 날씨에 거리로 내몰고 있다. 또한, 회사는 천막농성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추가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원바이켄 노조는 앞으로 천막농성과 서울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폐업신고를 한지 134일째를 맞고있는 세원바이켄노조의 안상기 조합원은 '회사측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폐업이며 앞으로 이를 분쇄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펼쳐나가겠다'며 추운 날씨에도 지친 기색없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또한, 안산에 있는 대성산소 용역 노동조합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회사 정문앞에서 천막농성 52일째를 맞고 있다. 대성산소에서는 6년전 정규직을 용역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올해 용역을 철폐하면서 이들 용역 노동자들은 해고된 상태이다.

현재 4명의 조합원이 천막농성중이며 회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섭대상자가 아니라며 회사는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추운 영하의 날씨는 아랑곳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

는 회사들의 행태는 이 겨울만큼이나 춥다. **다산**

경찰폭력근절 멀기만한가!

경찰봉으로 귀, 머리, 다리가격!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새벽 01시경, 윤모씨 등이 수원 남문에 소재한 술집에서 소란을 벌이다가 경찰관 2명에게 연행됐다. 이들중 윤모씨는 파출소로 연행되던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서류를 던지는 등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윤모씨에 대해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면서, 경찰관 한명이 CC-TV를 손으로 가리고, 기다란 경찰 곤봉으로 우측머리, 왼쪽귀부분, 우측다리 등을 가격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다.

윤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다리를 여섯바늘 꿰맸으며, 현재까지 강한 통증을 호소하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의 가혹행위에 대해 수원중부경

<인권의 눈>

살색 크레파스와 개고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윤재훈

지난 11월 26일 대한민국의 '살색크레파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종차별 혐의로 진정되었다. 아무 죄도 없이 인종차별주의자로 고발된 살색 크레파스 자신은 무척이나 억울한 일이겠지만, 크레파스나 수채물감 등에 딱 하니 놓여있는 살색은 수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성남 중국동포의 집 김해성 목사와 함께 살색을 진정한 스리랑카인 비키씨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1년전 어느날 전철에서 당한 황당한 일을 털어놓았다. 비키씨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았다고 한다. "엄마,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새까매?" 그 질문에 아이의 엄마는 "잘 안 씻고 목욕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새까맣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며칠 후 쉼터에서 만나게 된 비키씨에게 방송에서 보았다는 말을 하자, "그 거 거짓말 같아요?"라며 물어본다. 한국에 온지 3년도 안되었지만 한국말을 잘 하는 비키씨는 차리리 한국말을 알아 듣지 못했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텐데 라며 말은 이어나갔는데, 그것은 의외로(?)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개고기 논란'이었다. 그는 일전에 소개된 프랑스 여배우가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야만적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비키씨는 원숭이 골과 말고기를 즐겨먹는 프랑스인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한국인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듯이, 살색도 다른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나타내는 것인 만큼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엔인권선언은 '사람은 인종, 국적, 성, 피부색 등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키씨를 비롯하여 많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이 외국인이 살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한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이고, 식당에서 수저로 밥을 먹으면 왜 손으로 먹느냐며 비웃기도 한다. 살색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살색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이 색명이 우리 아이들의 의식 속에서 자신과 다른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검은 피부색도 살색이고, 미국사람들의 하얀색도 살색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10년, 20년 뒤 전철안에서도 '씻지 않아 지저분해서 피부가 까만'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살색 하나 없앤다고 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인권침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살색 없애기"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기다려지는 것은 메마른 우리 사회에 소중한 희망 하나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찰서 "청문감사관"의 자체 조사결과는 윤씨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정당하며 어떠한 가혹행위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상태이다.

현재 윤씨측은 고소, 손해배상 등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가 인권위에 진정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산**

법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 인정 판결

수원지방법원(민사 제12단독 이준상 판사)은 지난해 이라완씨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라완씨는 97년, 3개월 여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서울,수원 등에서 공장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었다.

사건은 작년 10월 7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작업을 하고, 인도네시아인 동료들과 함께 수원역 인도네시아인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중, 당시 수원역 부근에서 칼에 찔려 숨진 감비아인의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어 수원 고등동 파출소로 연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라완씨는 당시 경찰이, 파출소 지하실로 끌고가 무릎을 꿇게하고, 구둣발로 짓이기는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마 위 10바늘과 머리부위 6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태현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종합법률사무소)는 "다행이 사건발생 초기에 시민단체에서, 증거보존 신청 등 빠른 대응으로, 자칫 은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다행이 일부 승소판결을 얻어내는 계기가 되었다"며 기뻐했다. **다산**

다산인권

제50호
2001. 12. 26.(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박진 ●편집인 : 송주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검찰의 레미콘 사업주 감싸기 처분에 각계 항의성명 잇따라

레미콘 운송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검찰, 레미콘 사업주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분

지난 주말 서울지검 공안2부(박철준 부장검사)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장문기 위원장)이 부당노동행위로 유진기업 등 레미콘 사업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레미콘 사업주를 '무혐의' 처분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건설운송노조는 지난 9월 22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4월 10일부터 '노동조합 인정,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한 지 이제 300여일이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레미콘 노동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레미콘 사업주들은 대법원 판결전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긴 파업기간동안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요구조건을 유보한 채 복귀한 수많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레미콘 사업주들은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한 신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노동조합 탄압을 해왔다.

건설운송노조가 지난 20일부터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과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 투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나온 검


찰의 이번 처분은 '레미콘 사업주 편들기'라는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처분이 내려지자 각계의 항의성명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민중연대를 비롯한 43개 인권, 시민, 사회단체는 항의성명에서 '파업투쟁 기간동안 노동자들은 11명이 구속되고 50명이 불구속되었고, 250명이 즉결에 넘겨진 상황에서 합법적인 파업을 한 노동자들은 업무방해로 범죄자로 내몰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업주들은 무혐의가 되어야만 하는가'라면서 검찰의 편파수

사를 비판했다.

또한, 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성명에서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국회까지 모두가 레미콘 운송기사가 노동자란 사실에 이견이 없는데, 유독 검찰만이 이를 뒤엎고 레미콘 운송기사가 노동자가 아니라고한 처분은 검찰이 레미콘 사업주들의 사설 검찰이 아닌 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며 검찰의 레미콘 사업주 감싸기 행위에 일침을 가했다.

민주노총과 사회당도 항의성명을 발표하면서 레미콘사업 -2면에서 이어짐-



올해도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은, 시간보다 빨리 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직도 냉정한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늘 넉넉한 마음으로 빈곳을 채워가면서 살고자 하는데... 항상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착하지만 힘세고 고집스럽고 용맹스런 인권이 되어서 지구를 위협하는 나쁜 무리들을 혼내주겠습니다. 그동안 다산인권을 지켜봐주신 여러분의 애정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이웃들과 다산인권센터 가족들 올림

새로운 뜻과 의지를 위해 다음주는 휴간합니다.

1면에서 계속됨-주는 처벌하지 않고 노동자들만 처벌하는 검찰의 형평성없는 처분을 비판했다.

건설운송노조는 31일 검찰의 처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다산**

죽음의 고압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미군, 파주시 전동록씨에 대해 적절한 보상조치 없어...

경기민중연대(준)는 지난 7월경 미군부대 인근 작업중 고압선 감전으로 중화상을 입은, 전동록씨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당시 전동록씨는 경기 파주시 조리면 뇌조리 캠프하우스 후문 옆의 대우제판 공장증축현장에서 작업중, 미군부대 22,800볼트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공사시작전부터 건물주와 마을 이장이 미군부대쪽에 '공사를 해야하니 고압선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미군부대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없이 일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사고발생 3일전에는 미군측 전기 담당자 세명이 나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는 "괜찮으니 일단 공사를 진행하라"고 했다고 알려졌다.

전동록씨는 사고당일 4도의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현재는 양팔과 양다리를 절단했고, 사고 휴유증으로 신부전증과 장기손상의 내상을 입었다. 특히, 고막에 입은 손상으로 왼쪽귀는 들리지 않는 상태고, 그나마 한쪽 귀마저도 귀에 가까이 대고 큰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겨우 들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경기민중연대(준)는 미군부대 내외의 시설물에 대한 실태파악과 위험시설물

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것으로 밝혔으며, 전동록씨 치료비와 생계지원을 위한 후원금 모집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고압선은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산**

다산인권이 선정한 올해의 인권뉴스 10

올해는 평화의 세기를 바라는 인류의 염원을 저버린 전쟁과 파괴의 한 해가 되어서 무엇보다 유감이었습다. 전세계의 맹위를 떨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과 폭력적 상황에 노출시키는 신자유주의의 위협 또한 여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뉴스는 어쩌면 반인권의 상황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역할 밖에는 할 것이 없겠지만, 인권의 새해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해를 반추해 봅니다.

- 인권은 없고 위원만 있는 국가인권위? 3년여를 끌어온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누더기 통과, 밀실인선을 통한 인권위원 선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시작.
-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활동가 명동성당 노숙단식농성 30년만의 폭설과 혹한 속에서 인권활동가들 개혁입법을 위한 명동성당 노숙단식농성과 국회 기습 시위, 하지만 국회에는 여전히 소 귀에 경 읽기.
- 특수고용직 레미콘 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 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요구 법원, 노동위원회, 노동부서 근로자로 인정, 사업주는 막무가내 노조탄압. 검찰은 사업주 편들기(검찰은 사업주 마누라), 김철준변호사와 시민단체들 릴레이 단식농성
- 수원 남부경찰서 의경 구타 사건. 지역단체, 인권단체들 진상규명 요구 경찰 의경 구타 사실인정, 징계조치. 지역단체들 서장파면. 청장공개 사과 요구는 멀고도 험한길
- 죽음부른 안산 가정폭력 가해자 상해치사로 기소 가정폭력은 살인죄 적용안돼나, 죽도록 패서 죽었는데 상해치사?
- 회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구속자 양산 기계 국가보안법은 만능 엔터테이너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버지 임종도 못보고, 결혼전에 신랑을 가두는 구시대의 악법
- 인터넷 내용등급제 결사항전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정통부 장관 퇴진요구하며 활동가들 60일간 명동성당 철야 릴레이 단식농성. 인터넷은 등급제가 판치는 통제의 전쟁터
- 시민사회단체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구성 한국의 맹목적인 미국 전쟁지원, 미국과 한국은 가까이 두고 오래사귄 벗. 지금도 미국의 지원속에 세계의 민중은 죽어가고 있다.
- 국정원 '테러방지법' 발표 테러방지법은 업그레이드 국가보안법. 통과되면 인권은 없고 침해만 있을 뿐, 부활하는 국정원.
- 노상에서 경찰 대우차 노동자 집단 구타, 누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 했는가. 경찰의 힘은 무소불위, 합법집회도 경찰 마음대로 불법집회로 둔갑시킨다.

... (Faint, illegible text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

다산 인권

2002년 1월 ~ 12월

51호 ~ 100호

"복지소를 원정한다. 풍수현역처도 숭수"

... (Faint text below the quote) ...

다산 인권

제51호

2002. 1. 9.(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박진 ●편집인: 송주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거기, 희망이 있습니다

2002년에는 지자체선거, 대통령선거, 월드컵 개최 등, 한국을 뒤흔들어놓을 만한 국가적 행사가 주욱 늘어 서 있습니다. 경제신문의 기고문에서 "반도체는 세계 2위, 조선과 철강은 각각 세계1위, 2위를 그리고 자동차는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강국으로서의 견고한 위치도 잡아가지고 있는 중이다."는, 그래서 국가브랜드를 재고하고 기업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누리자는 글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희망과 포부로 열어놓은 2002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전 직원의 12.3%를 정리해고한다는 신고서를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고 하고, 공공얼어붙은 남대문에는 23년동안 시장살이를 해온 왕 고참이 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사교육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으로의 이주가 꼬리를 물고, 백화점 명품관에서는 수천만원의 지갑, 벨트가 불티난 듯이 팔려나갑니다.

우리는 20대 800이아니라 2대 98의 사회가 오지는 않을까 우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해에 사람들은 담배를 끊고, 영어학원 새벽반 등록을 하고, 마라톤 연습을 시작합니다. 또 구세군 남비에 만원을 놓던 손길을 잊지않고,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어려운 이웃의 집으로 자원봉사를 갑니다. 우리는 체불임금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으며, 다산인권을 보내준 성의에 감사한다는 구치소 수감자의 소중한 편지를 받으며 사람들이 있으니, 역시나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 힘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할것입니다. '거기, 희망이 있었다.'라는 인사를, 한 해를 정리하는 때 꼭 다시 드리겠습니다.

“폭격소음 인정한다. 향소심에서도 승소”

매향리 폭격장, 주민들의 손해배상소송청구 1천여만원 받아들여져...

오늘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 9부는 매향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가는 주민들에게 1천105만~975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98년 2월 전만규씨를 비롯한 매향리 주민 14명이 인근 쿠니

사격장의 미군전투기 사격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으로, 이미 1심 판결에서 "미군 훈련에 따른 주민 피해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한 내용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주한미군 훈련

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재판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한미군 범최근절 운동본부 이수희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 내용이 국가안보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한다는 것을 재확인한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 매향리 주민들은 향후 국가가 대법원에 다시 소송을 (2면에서 계속)

(1면에서 이어짐)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 역시 1심 판결에 이어, 소음피해 이외에 오폭피해, 가축피해등을 인정 하는 판결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대신**

대체인력 부족, 낮은 급여로 육아휴직신청자 낮아....

지난 해 11월 모성보호확대와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분담확의 전기 마련이라는 입법취지를 안고 모성보호관련법이 시행됐다. 당시 육아휴직급여는 월 2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에 의하면 지난해 2522건의 여성 상담 중 모성관련 상담이 187 건이었고, 임신·출산·결혼 등으로 인한 성차별적인 해고나 해고압력에 대한 상담도 223건이나 되어 여성들의 모성보호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장에서는 산휴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이정희 사무국장은 “육아휴직 제도 시행이 채 두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육아휴직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분위기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육아휴직급여로 인한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낮은 신청의 원인이며, 또한, 육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시키는 것과 점차적으로 급여를 인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신**

동성애자차별법 철폐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 가져

9일 오전 11시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5개 단체는 느티나무카페에서 ‘동성애자차별법철폐와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해 11월 1일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아래 정부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한 이래, 동성애자 커뮤니티 사이트인 ‘엑스존’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고, 이에 항의하여 엑스존은 자진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또한 지난 해 10월부터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등 시민단체와 각계인사들은 60일간 명동성당 릴레이 철야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는 ‘대한민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조인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유권 조약 제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자유권 조약 제2조와 제26조에 명시된 제 평등권 중 유엔인권이사회가 특별히 포함시킨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구호와 단식농성 등으로 검열과 차별에 반대하는 항의를 해왔으나, 관련기관과 제도의 형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경계하며, 그동안 검토하고 분석한 여러 가지 결론들을 바탕으로 동성애 차별법 철폐와 인터넷 내용등급

제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청구라는 전면적인 법적 대응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라며 이번 법적대응의 의의를 밝혔다. **대신**

‘인도래’ 인계동 마을주민신문

지난해 12월 27일 수원인계동 주민들에게는 ‘인도래’라는 색다른 이름의 신문 하나가 배달되었다.

인계동의 옛지명이며,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신문이라는 부제의 이 신문에는 기사가 모두 인계동의 주부들이다.

지난 9월부터 수원kyc(한국청년연합회 수원지부)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을신문을 만들기 위한 주부기자학교를 개설하면서, 풀뿌리는 자라기 시작했다.

현재 인도래는 주부기자8명과 발행위원 20명, 편집위원장까지 둔 명실상부한 신문사를 구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야학을 탐방해서 이웃들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고 있고, 녹색물물교환코너까지 두고, 재활용 생활화와 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생활속으로 옮겨놓고 있다.

신문제작에 함께하고 있는 수원kyc 박영철 대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향후에 함께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마을신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앞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해내는 주역으로써 인도래의 앞날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신**

다산 인권

제52호
2002. 1. 16.(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박진 ●편집인 : 송주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경찰,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예바다이사들의 발을 묶다.

평택 경찰, 예바다 공익이사들의 합법적 출입 막아...

사회복지법인 예바다복지회와 예바다정성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1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예바다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후, 평택으로 내려와 ‘예바다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했다.

현재 구재단측 인사인 농아원장 직무대행과 행정실장은 ‘예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추천의 공익이사들에게 업무 및 재정보고 조차 하지 않으며, 지난 10월에는 교장실과 교실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장기간 휴업에 들어가는 파행사태를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평택시청과 평택경찰서, 경기도 교육청은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수수방관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집회후, 예바다복지회 이사들은 농아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평택경찰서에서 나온 경찰들은 ‘폭력사태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윤귀성 대표 이사들의 정문 출입을 방해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사태, 교장이사장들이 정문에서 출입을 방해 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협조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지 않느냐”는 이사들의 질문에 대해 오후 1시

부터 5시까지 정문앞에서 이사들의 출입을 방해한 경찰들은 “불법일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바다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부터 하고 와라. 그리고 정문을 출입하려면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은후에 와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

이사들은 경찰측이 폭력사태를 방지하겠다는 미명하에 구재단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비호하는 상황에 불과하다면서 분노했다.

또한 예바다 이사중 1인은 “구재단측

이 민주적 이사진들이 다수 구성되자, 대외적으로 민주이사들이 구성되어도 예바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민주 이사들의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이다.”라고 설명했고, 평택경찰측의 불법적 태도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윤귀성 대표이사는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구재단측의 직원으로 보이는 자에 의해 낭심을 견어차이는 등, 버젓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향후 이사회에서는 (2면에서 계속)

청소년 인권사업의 아이디어를 빌립니다

다산인권센터는 2002년 한해동안 청소년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에 접근하고 합리적 해결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보다 더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청소년인권을 공유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싶습니다.

청소년 인권사업의 아이디어를 빌려주세요.

.....

△홈페이지 www.rights.or.kr의 자유게시판이나 humandasan@hanmail.net으로 의견을 주시거나 전화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1면에서 이어짐)이사들의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과 의'부인들의 출입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정문 출입을 시도했을때도 경찰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시**

한통계약직문제에결측구 위한 2차온라인시위

오는 16일 한국통신계약직노조가 파업 400일을 맞아 '한통계약직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온라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작년, 한국통신은 구조조정을 빌미로 사상유례없는 계약직 7,000명을 대량해고 했고, 이에 맞서 한통노조는 파업을 단행했다.

그 동안 한통노조는 목동전화국 농성, 국회의원사당 진입 시위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부당해고를 알리는 노력 등을 해왔고, 1,000인 실천단을 모집하여 1인 시위 등을 조직, 지난 해 12월 13일에는 청와대와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리는 사이버 시위를 단행하기도 했다.

한통노조는 이번 2차 온라인 시위가 '400여 일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한국통신과 김대중정권을 규탄하는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시위 시간은 16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12까지이며, 대상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노동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 '한통 계약직문제 해결하라'는 글을 시작으로 항의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특시**

자원봉사자모집
문의) 031-213-2105

청소년 인권을 위한 매뉴얼북 "通話, 따르릉..." 경기복지시민연대, 수원시 청소년들에게 배포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청소년인권을 위한 매뉴얼북을 제작했고, 현재 이 매뉴얼북을 청소년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청소년인권매뉴얼북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 "건강한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청소년 인권평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되었고, 현재 수원지역 청소년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매뉴얼북에는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인권

의 문제들과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는지를 만화와 이모티콘 등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다.

매뉴얼북 제작에는 학생인권연합과 수원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에게 알맞은 정보를 수집하고, 내용편집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경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아직까지 청소년인권이란 말이 청소년들사이에서 생경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매뉴얼북은 예쁘고, 인권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노트형식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북이 청소년 인권의 길잡이로써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특시**

(가칭)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 참가단체들, 워크샵 가져...

오늘 16일(수) 오후2시부터 (가칭)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은 참여연대에서 워크샵 및 공대위 준비모임 3차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정보통신 관련 문제 법률, 문화예술 관련 문제 법률, 엑스폰 사례 관련 위헌 소송 및 행정 소송 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공대위의 조직(안), 활동 목표(안), 사업 계획(안) 등에 대해 회의를 갖고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1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PC방에 사설 인터넷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면서부터는 동성에 관련사이트들이 차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5개 단체가 '동성애차별법철폐와 인터넷내용등급제폐지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관련기사 다산인권 51호 참조), 이후에는 국제계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에서도 행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영국 BBC 방송이 한국의 행정소송 소식을 소개하기도 했고, 이 문제가 더 이상 동성애들만의 문제가 아닌 몇몇 소수의 피해가 되지 않음 이 나타나고 있다.

준비모임은 이 회의를 통해 오는 6월 경에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대위가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인터넷과 관련한 정보통신부의 자의적 검열이 저항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시**

다산인권

제53호
2002. 1. 23.(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박진 ●편집인: 송주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이왕지사 옮길 것, 미국으로 가라!

용산미군기지 대체부지 선정 송파, 성남, 수원 지역 주민들 반발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9일 용산미군기지이전의 대체부지로 송파, 성남, 수원 등 수도권일부 지역이 거론되면서 관련지역 주민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성남, 21일 수원·송파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들은 각자 '용산미군기지이전반대'의 결의문과 항의성명서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부분 용산미군기지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미군기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해당지역으로 이전해오는 것에 불과하고, 주한미군의 주둔문제가 민족화해와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재 주둔 자체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심각하다'는 점들을 들어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또한 '용산미군기지는 서울 외곽으로 이전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기지를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며 주한미군은 한국의 국방은 한국에 맡기고 자기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중 송파구는 '지역문제는 주민 참여하에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 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완전 배제된 채 지역 장래

를 좌지우지할 이러한 계획이 보도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군기지는 미군범죄 등의 문제뿐 아니라,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녹사평역 지하수 기름오염사건과 한강독극물 방류사건등과 같은 환경파괴 등을 일삼은 것으로 지탄 받아왔다.

지난 90년에는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이 발표된 후 '용산미군기지평택이전을결사반대하는시민모임'이 구성되어, 3년간 투쟁을 통해 방침이 철회된 적도 있었다.

당시 공동대표를 맡았던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운동본부' 김용환 위원장은 "SOFA의 어느 조항을 봐도 미군기지에 대해 '이전'이라는 말은 없다면서, 용산기지 지방 이전 논의에 대해 용산기지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다. 미군이 철수되는 때까지는 현재상황에서 기간을 정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전문제를 꺼내지도 말아라."라고 말했다.

미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수원공군기지내에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48개가 있고, 상주하는 사람은 미군이 436명을 비롯, 전체 491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 29일 수원지역 계정당 사회시민단체들은 (가칭)용산미군기지 수원이전반대 대책위 구성을 위한 확대간담회를 경기불교문화원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지역단체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대응의 근본적 해결책은 용산미군기지의 미국이전, 주둔미군기지의 축소, 기존미군기지의 임대료지불 등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시**

<정정기사>
지난 다산인권 52호의 (가칭)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 참가단체들, 워크샵 가져...의 기사중 "준비모임은 이 회의를 통해 오는 6월경에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대위가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의 6월 경을 2월경으로 정정합니다.

**이주노동자100여명
체불임금지급요구하며 파업돌입**

지난 21일 오후 12시 (2면에서 계속)

(1면에서 이어짐) 경기도 포천 소재의 아모르 가구에서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3억 여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아모르 가구는 10여명의 한국인 관리직 사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산작업을 100여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도맡아 하고 있는데, 작년 8월 2일에도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항의하여 이주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는 상습적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 노동착취업체라고 할 수 있다.


회사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하에서도 기숙사 및 공장증축을 했고, 1억 3천 만원에 달하는 기계를 새로 들여오기도 하는 등 상식이하의 회사 경영을 하면서도 이주 노동자들 중 3명이 산재를 당하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100여명의 이주 노동자들은 기숙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회사측은 흑한의 날씨에 기숙사에 단전, 단수를 시도 하는 등 탄압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임금을 지급 할 수 없으니 모두 나가라, 말을 듣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여 추방시키도록 하겠다'며 협상은 고사하고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 이주 노동자들은 새벽 1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며 일한 대가가 임금체불로 이어져 더 큰 분노를 하고 있다.

100여명의 이주 노동자들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각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들은 회사측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악용하여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다산]

▷후원요청) 02-747-6830~1

인권의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조건없는 산재적용을...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으로 산재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마치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하는 진보적인 조치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이번 개정은 이미 법원이 판결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에 마지못해 산재보상법상의 재해를 추진하는 절차로 생색을 내는 것에 다름아니다.

바라건대, 노동부는 생색내기에 급급하지 말고, 먼저 산재보상법상의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법원이 아닌 노동부 스스로, 산재환자는 물론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길을 마련해줘야 옳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개정할 산재보상법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노동부가 노조전임자를 무조건 산재보상법상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산재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 활동 중의 재해라는 것이다.

역으로 해설하면,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활동을 하지않고 회사 노무부서의 역할을 담당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을 해주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산재보상법이 노동조합 전임자들의 활동방향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3권에의해 보장받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의무이기도 하다. 전임자란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가진 활동가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조건없는 산재보상법의 적용확대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진정한 산재보상법상의 목적인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계도지와 기사실의 폐해를 고쳐나가기 위한 경기지역의 대안과 실천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경기지역 계도지와 기사실 문제 간담회

- *일시 : 2002년 1월 24일(목)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경기본부(031-226-0908)
- *주최 : 경기민언련, 민주노총 경기본부

다산 **인권**

제54호

2002. 1. 30.(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박진 ●편집인 : 송주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비교되는 지방자치단체들, 미군이전의 문제..행정적 규제에 의해 판단될 문제라고?

경기도와 수원시 가장 소극적 답변... 비난여론 높아져

용산미군기지의 수도권지역 이전 발표 후,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당지역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는 지난 28일 경기도청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23일자로 경기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촉구했고, 경기도청은 집회가 끝난후 답변서를 전달했다.

답변서는 '기지이전과 관련 국방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사전협의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한·미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입장표명이 어려우나 향후 정식 협의를 요청 받을 경우, 각종규제(수도권정비,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 등)를 감안해서 별도의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는 즉각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방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미군이전의 문제는 각종 행정적 규제에 의해 판단될 문제가 아니라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지부는 각 지구당 및 사회단체

들과 연계해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의 대응을 보면, 송파구가 가장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경기도와 수원시가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홈페이지 팝업창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 보도와 관련하여 송파구의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제하의 미군기지이전을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송파구는 주민들의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미군기지 이전 관련 이전비용 등 모든 문제가 한·미군 관계자는 물론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룬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성남시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기지이전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적극적인 반대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수원시는 열린시장실의 시장에게 바란다는 관에 시민이 기재한 기지이전관련 질의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향후 미군기지 이전에 따

른 국방부의 협의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입장 표명과 대책을 강구도록 할 계획입니다.'라고만 입장을 밝혔다.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차이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특히 경기도와 수원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산]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제정 판결 나와...

지난 29일, 서울 남부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수(21, 대학생)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사건심리를 정지하고, 청구된 사안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경수씨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준)는 '남부지원의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후 헌법재판(2면에서 이어짐)

(1면에서 계속)소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사상, 양심, 자유에 대한 보호와 인간존엄, 행복추구 등의 실질적 침해 소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판결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오대양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금지한 현행법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서 제출건과 관련되어 또다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해 60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해 형사처벌되고 있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향후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대를 걸어보게 한다. **다산**

"구속 노동자 석방하라"

기아자동차노조, 구속된 노조원들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지난 26일 기아자동차 김정수씨를 비롯한 노조 대의원 4명이 작년 3월에 있었던 "대우차 해외매각 반대 집회" 관련해서 긴급 체포, 29일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이에 대한 항의로 28일 인천시경 소속 보안수사대 앞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다음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보고대회 등을 연일 갖고 있다.

그 동안 4명의 노조원들은 자신들이 수사중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대부분 집에서 체포되었고, 그 중 한 명은 돌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 노조 최귀언 총무실장은

"이번 사건은 오는 2월 있을 임시국회에서 예상되는 노동법 개악음모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을 염두에 둔 탄압이라고 여겨지며, 한편으로는 4월 입단투를 대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무슨 무슨 집회에 참석했었다'는 이

유를 들어 어느 누구에게 닥칠 지 모를 체포, 구속에 모든 노동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현재, 관계당국이 사전 소환 조사 등의 절차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분명한 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산**

훈장은 박탈되고 그는 이제라도 구속되어야 합니다

유진종합개발(주)회장 유재필의 국민훈장모란장 수여에 부처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의 희망찬 날

마디굽은 손으로 두주먹 불끈쥐며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던 레미콘 조합원들을

회사에서 해고되고 여의도에서 당산철교 아래에서 새우 잠자던

그 모습을

그래도 괜찮다며 씩 한번 웃으며

내일의 희망을 얘기하던 당신들 레미콘 조합원들을.

그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은 안돼,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야"

수백명 해고, 수백명 형사고발, 용역강패 폭행의

한가운데 항상 그 모란장의 주인공은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회사로 돌아간 레미콘 조합원에게

"회사로 돌아오려면 무릎 꿇고 반성해" 목소리의 주인공도

그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훈장은 박탈되고 그는 이제라도 구속되어야 합니다.

헌법 보장의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그이기에

무차별 용단해고로 생존의 위협을 주었던 것도 그이기에

레미콘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하게 만든 것도 그이기에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노동탄압을 일삼은 것도 그이기에

훈장은 박탈되고 그는 구속되어야 합니다.

다산인권

제55호

2002. 2. 6(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박진 ●편집인 : 송주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부시, 당신의 입국을 불허한다.

오늘부터 부시 방한 반대투쟁 본격 시작

19일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대규모 조직적인 방한저지투쟁이 전개될 예정이다.

2월 6일 오전 11시에 미대사관 옆 한국통신 앞에서 부시방한 반대 제민주 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 6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한반도 전쟁분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반도 전쟁정책 중지 ▶신자유주의 세계화중단 ▶MD강요, 전쟁무기 강매중단 ▶미군기지 전면반환 ▶소파협정 개정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노력 간섭, 방해 중단 ▶굴욕적 한미공조 중지 등 부시 방한 반대 7대 핵심 요구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설 귀향선전전(8일~9일) ▲전국 미대사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14일~21일) ▲부시 방한 반대 전국 동시다발 집회(16일) ▲2002 한반도 평화선언대회(18일) ▲부시 방한 반대를 위한 시국농성(18일부터) ▲그림자 투쟁(19일~21일) ▲부시 방한 반대 범 국민대회(20일) ▲부시 방한 반대 현수막 걸기 등

집중적인 부시 방한 저지 활동을(14일부터)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도 7일 오후 2시 다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제단체 간담회를 갖고 전국적인 투쟁계획과 병행해서 독자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18일)과 신문광고 투쟁(18일) 그리고 경기도민 결의대회(16일)등 집회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운동진영은 대 테러전쟁을 선포하면서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목하며 위협하고 있는 부시 정부의 정책이 상당기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부시방한에 맞춘 일회적인 투쟁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평화운동, 통일운동으로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투쟁은 올해 첫 광범위한 대중투쟁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산**

경기지역 노동자의 구심체인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새로운 투쟁일꾼이 선출됐다.

지난 4일 오후 2시 수원시체육회관 2

층 강당에서 열린 민주노총경기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기 2년의 새 경기본부장에 금속연맹 경기본부장인 김상완씨, 사무처장에 건설산업연맹 조직본부장인 정용길씨가 선출되었다.

단독 출마한 이들은 참석대의원 162명중 88.9%인 14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됐다.

"신자유주의에 대항해 싸우겠다"

김상완, 민주노총경기본부 새로운 일꾼 뽑혀

김상완 신임본부장은 당선소감에서 자신이 내세운 신자유주의의 정책 폐기,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현장성 강화, 경기민중연대(준) 강화, 본부 외 지구협의 조직적 통일성 등 5대 공약 15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180여일 동안 회사 쪽의 일방적인 직장폐업과 회사 고용 용역강패에 맞서 살기 위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화학섬유연맹의 세월바이캠 노동조합 등 6개 노조가 모범(2면에서 이어짐)

(1면에서 계속)노조로 수상을 하기도 했다. **다산**

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이 확정된 데 이어 시행령 안이 통과됨으로써 기본적인 법령체정이 마무리 됐다.

이번 시행령 안에서 그동안 복지부와 사회복지계의 반대로 논란이 되었던 국가인권위 방문조사 대상인 다수인 보호시설에는 노인·아동·장애인복지 시설과 정신보건시설, 부랑인 복지시설, 갱생보호시설 등이 포함되었다.

구급시설조사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 구급보호시설의 방문조사 시 사전통보 없이도 방문조사 ▶ 구급보호시설 방문 시 진술의 청취, 자료제출의 요구, 녹음·녹화 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에 의한 조사 ▶ 구급보호시설 수용자들의 진정을 위해 진정함 설치 운영 ▶ 징벌기간중 진정권 행사 등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출범이후 두 달이 넘어선 지금에야 기본법령이 마련되어 사무처 구성과 그에 따른 업무분장이 늦어지고 있어 상당기간이 지나야 본격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산**

행정법원, 자기 정보에 대한 불 권리 인정

지문날인 반대연대 논평 발표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감독 이마리오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문날인 반대 연대(www.finger.or.kr)는 논평을 통해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자기 정보에 대한 불 권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지문정보를 포함해 개인신상정보와 그 보유형태 및 전산화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내용 등을 본인에게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다.

그러나 경찰청은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사본 등 청구 내용의 일부만을 공개하고,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 9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4개월만에 자기 정보를 불 권리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행정상 필요에 의해 수집,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당사자인 본인에게조차 열람되지 않았던 것이 관행이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수많은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고압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 국민의 권리를 뒷전으로 여겼던 행정기관의 관행에 일침을 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이해가 일천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열람권조차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논평을 통해,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 관리하는 국가기관들이 개인에게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의 동의권, 이의 제기권 등의 권리, 자기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 더 나아가 프라이버시권 일반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문제의식을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산**

**다음 주 다산인권은 휴간합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즐겁게
지내세요.**

▶ 이 주간에 경기지역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2/7(목) 10:00 철도노조 연대투쟁 관련 경기지역 간담회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 2/7(목) 14:00 부시 방한 반대투쟁 관련 경기지역 제 단체 간담회 (다산인권센터)
- 2/7(목) 14:00 지방자치 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 시정운영과 지방자치'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 2/7(목) 15:00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반대 수원지역공동대책위원회(준) 전체대표자회의 (수원환경운동센터)

다산인권

제56호

2002. 2. 20(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박진 ●편집인 : 송주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철도노조, 민영화반대 25일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주5일근무제 개악저지 등을 위한 등 2월 총파업지침 내려보내...

부시방한을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반미투쟁이 확산되고 있는 동안 노동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재길)은 2월 25일 임시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민영화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이날을 총파업 D-day로 잡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수차례의 노사회의를 통해 철도민영화문제를 다뤘지만 정부차원의 강경방향이어서 정책선회가 없는 이상 총파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에서는 민영화만 들어주면 해고자복직 등 모든 것을 다들어 주겠다'고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현재 제2, 3의 지도부를 세워놓고 장기적인 투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여주었다.

지난해 5월 철도노조 최초의 직선 민주집행부가 들어선 첫 대중투쟁이어서 사활을 건 철도노조의 이후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21일인 내일부터 전조합원 철야농성과 24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을 예정이다. 경기지역에서도 각 철도지부차원에서 파업출정식(22일 안산

지부, 23일 부곡지부 등)을 갖고 서울에 집결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5일근무제의 개악저지등 주요현안을 놓고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21일부터 단위노조 전간부 농성투쟁에 이어 24일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

고 25일 민주노총 총파업지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에서 얼마나 많은 참가가 있을지 미지수지만 2만 5천 규모의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맞물려 있어 노정간의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산**

“테러방지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심의 앞두고, 인권시민단체 21일 긴급기자회견

테러방지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될 것으로 보여 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번 국회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으며 인권단체들의 반대로 일단 보류되었던 이 법안이 20일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법은 지난번 여야가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그 처리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따라 지속적으로 이법의 부당성을 주장해온 인권단체들은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강력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별단체마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팩스시위를 펼치고 있다.

또한 21일 오전 11시에는 국회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정보위 상정에 즈음한 인권, 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힐 예정이다.

그리고 기자회견후에도 정보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반대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오후 2시에는 공동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20일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입법추진중인 테러방지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2면에서 이어짐)

(1면에서 계속)다, '입법 전제조건 미충족, 테러행위 예방 및 진압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등 여러 문제점을 전면 제거하지 않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 법안에 대해 국정원, 정당 및 법조계, 시민단체, 국제인권법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청취, 연구, 검토절차를 밟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인권에 대한 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명)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신**

용산미군기지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수원지역 공대위(준) 시장, 의회의장, 국회의원에 공개질의서 보내

수원환경운동센터등 수원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지역 용산미군기지이전 결사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8일 용산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시장, 의회의장, 국회의원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공대위의 이번 질의서에는 '송파구와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 모두 기지 이전반대라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수원시는 해당 지자체 중 가장 미온적인 자세로 현재의 상황을 관망하고 있고, 수원지

역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대해서도 아무런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아 실망을 주고 있다'며 수원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주 23일(토)까지 답변을 기다리기로 하고 그 답변에 따라 향후 면담 및 항의방문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서울 송파구는 구청홈페이지를 통해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발표했고 성남시와 시의회는 공동으로 지난 2월 4일에 미군기지이전 반대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특신**

매춘여성 인권지킴이?

경찰청, 매춘업소 인권유린 대책 그 실효성 의문

지난 18일 경찰청은 매춘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매춘여성 인권지킴이 등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대책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기보다는 기왕의 내용이나 기존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대책을 나열할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악덕포주에 대한 사법처리 및 단전단수등 강력한 행정조치, ▶전국 사창가의 유관기관의 합동으로 잠금장치등 불법시설 점검 ▶매춘여성 인권지킴이 구성, 운영 ▶매춘여성 개별면담을 통한 인권유린 실태파악 및 고충

상담, ▶매춘여성에 대한 저축유도, 대화를 통한 탈매춘 유도 ▶홈페이지 '매춘여성 상담실' 신설 등이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군산 매춘업소 화재사건으로 나타난 매춘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그 대책을 세우게 됐다.',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큰 골격은 이번 에 밝힌 내용이다. 21일부터 전국 사창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작년에 화재사건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이제야 대단한 대책인양 떠벌릴 뿐 실질적인 대책이라 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특신**

부시 평택방문, 반대집회 열린다.

경기지역에서 부시방한 반대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어제 19일 부시가 들어오는 전용기를 타고 오는 성남에서 경기지역 단체들이 반대집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날 저녁 7시30분에 수원남문 중앙극장앞에서 청년학생연대 주최로 부시방한반대 촛불집회를 50여명이 가졌다.

그리고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는 2월 21일 오전 8시에 송탄미군기지(일명 오산기지, k-55) 앞에서 부시방한저지 평택시민대회가 열 계획이다. 19일 방한한 부시가 전용기를 타고 중국으로 떠나기 직전 송탄미군기지의 미군들을 격려하기 위해 평택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특신**

테러방지법 정보위 상정에 즈음한 인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 일시 : 2002년 2월 21일(목) 오전11시 ▶ 장소 : 국회 정문앞

다산인권

제57호

2002. 2. 27. (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박진 ●편집인 : 송주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구조조정은 경영상 결단? 파업은 생존상 결단!

대법원, 조폐공사 파업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간부 유죄판결

대법원이 보수적 판결을 넘어 철저한 자본의 시너지 판결이 나와 노동계가 분노하고 있다.

지난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구조조정과 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해 시위와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한국조폐공사 강재규 노조부위원장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

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조폐공사노조의 쟁의행위가 적법하나와 단체협약의 노사합의가 어디까지 효력을 발생하느냐이다.

99년 11월 19일 대전지법 형사합의 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난해말 정부

의 구조조정안에 의한 창 통폐합에 반대 벌인 파업은 같은해 2월부터 시작된 임금협상 결렬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창 통폐합이 해고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2면에서계속)

사고

우리 모두 새부대에 담긴 새술이라는 야무진 다짐으로 2002년의 기발을 꺾습니다. 다시 되돌아 볼때 부끄럽지도 스스로가 원망스럽지도 않은 한해가 되도록 뚝 달려가겠습니다.

1. 조직개편 : 2002년 3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조직 및 활동이 전면개편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산인권센터의 모든 수직적 직제를 폐지하고 각 활동가는 상임활동가로서 활동합니다.
- 병가로 휴직을 했던 송원찬 소장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했습니다.
- 그동안 자원활동가로 함께했던 노영란씨가 정식으로 상임활동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상임활동가들의 담당사업을 아래와 같습니다.
 - ▷ 박진 : 자유권, 인권교육 / ▷ 노영란 : 사회권, 인권영화제, 연대사업
 - ▷ 송원찬 : 총무 및 조직사업, '다산인권' / ▷ 송주현 : 상담
- 대표전화는 031-213-2105이고 인권침해신고 및 상담전화는 031-211-5855입니다.

2. '인권의 눈' 필진소개(3월 ~ 8월)

- 윤재훈(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실장) / · 허선(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박영운(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 김삼석(수원신문 기자, 군사평론가)

매주 수요일 발행되었던 '다산인권'은 다음인 58호부터는 발행일을 매주 화요일로 변경발행됩니다.

(1면에서 이어짐)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시 조폐공사의 임금인상 조기타결은 정의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이 노조의 정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 하나는 상고심 재판부는 단체협약에서 구조조정시 노사합의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사전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노조의 의견을 참고하는 '협의'의 취지로 '합의'를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은 법규범인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합의'의 성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합의'는 통보형식의 '협의'와는 전혀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판결의 중요한 잣대로 적용되어 왔다.

이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규탄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대법원이 부정한 것이자 해고등 노동자 회생을 부르는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마지막 수단까지 박탈하는 판결이다. 차라리 노동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경기지역 노조관계자는 "파업은 생존권의 결단이다. 이는 철도노조 파업과 무관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며 또 파업유도사건이 특검제까지 했지만 결국 술취한 1인의 해프닝으로 무죄판결이 나온 것을 생각하면 더욱 울화가 치민다'며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대신]

'테러라 급쇼?'

상공회의소 구속수감자 석방하라. 반미감정 고조.

경찰이 미 상공회의소 점거사건과 관련, 연행자 일부를 구속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민중연대(준)는 지난 24일 '한반도 긴장을 획책하고 내정간섭을 통해 무기를 감해하려는 미국은 한국민중의 분노가 분출된 미상공회의소 투쟁을 테러로 규정하며, 우리 정부에 관련자에 대한 신상을 요구하는 오만함을 또 다시 보이고 있다. 그도 모자라 미상공회의소 소장을 납치, 인질로 삼으려 했다는 억지 주장으로 한국민중을 분노시키고 있다.'며 미국을 규탄하고 우리 경찰에 대해서는 조속히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인해 25일 현재 14명이 구속수감중인것으로 밝혀졌으며, 경기지역에서만 건설노동자, 청년회 회원, 학생들을 포함한 7명이 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에는 황준환등 한총련 학생 2명은 미 상공회의소 사건으로 불구속으로 풀려났다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국가보안법 위반 이유를 들어 곧바로 용인경찰서와 경기도보안수사대로 이첩, 구속시켜 현재 수감 중에 있다.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비롯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오는 28일 성명서를 발표, 정부와 검·경에 구속자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고 미국의 망언에 대한 규탄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경기지역 구속자명단>

- 황준환(외대 용인캠퍼스 94학번)
- 김준협(용인대/2001 민중대회수배)
- 황규관(경원대/2001 민중대회수배)
- 박준마(경원대 96학번)
- 이효진(경기대 97학번)
- 김기우(하남청년회 회원)
- 조준행(건설일노조합원)

2002년 쌀수입개방반대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선포식

- 일시 : 2월 28(목) 10시
- 장소 :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 주최 : 전농 경기도연맹

3.1절 기념식 및 반민족언론 규탄대회

- 일시: 2002년 3월 1일(금) 12시 - 16시
- 장소: 수원역
- 주관 : 경기민언련
- 내용 : 1)3.1절 기념식-대회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
2)반민족언론 규탄대회- 일제하 언론단체의 반민족 행위 고발, 각 시민단체장의 규탄사

다산 인권

제58호

2002. 3. 5.(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천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또다시 폭력으로 얼룩진 에바다

김철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난동, 법인 사무국장 집단 폭행

지난 2월 28일 오후 4시경 에바다농아학교 권오일 교사와 에바다복지회 이사회 임시사무국장 남정수씨가 10여명의 농아학생과 구재단 측 사람들로 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이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호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농아원과 학교는 구재단측 관계자들과 그들에 동조하는 농아원생들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출입을 막고 있어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에바다복지회(이사장 윤귀성)는 에바다의 정상화를 위해 '출입방해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 9일 권 교사와 등은 이 결정을 공시하기 위해 법원 집행관과 함께 농아원에 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다.

구재단측 관계자들은 윤귀성 이사장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 찾아가 계란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수원에 있는 김철준 변호사(법인 이사) 사무실 앞에 오는 12일까지 집회신고를 해놓고 지난달 26일부터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26일 건물 유리문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경찰병력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일부 경찰의 이를 부러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지금도 김 변호사 사무실 앞에는 농아

원에서 해고당한 양봉애(전 농아원장 직무대리)가 농아원생들을 앞장세워

경찰과 대치하면서 유인물을 뿌리는 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김 변호사의 출입을 체크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이들의 시위로 인해서 같은 빌딩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법인 관계자는 "지금(2면에서 계속)

단상

前과 後, 또 다른 출발을 위하여

2년 전 가을 우리는 불혹의 나이를 훌쩍 넘긴 나이에 자신들의 권리를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을 만났다. 투쟁가를 부르는 데에도 익숙하지 않았고, 한 팔을 들어 구호를 외치는 데에도 쑥스러워하던 그들을 다시 만난 것은 12월 중앙대에서 열린 노동조합 설립보고대회에서였다.

한 달에 두 번 쉬는 유일한 휴식일에 그 자리에 모인 2,000여명의 레미콘 노동자들은 단결된 조직만이 노예같은 자신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고용주인 "갑"(운반도급 계약서에는 레미콘 사업주는 갑이고, 레미콘 노동자는 을이다)의 사업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 했고, 이들에게 '갑'은 여전히 사장님이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극도의 혐오증으로 푹푹푹 '갑'의 끝도 없는 불법과 악행이었다. 사업주들은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고, 해고를 일삼았으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다. 급기야는 이들의 얼마 안되는 전세 보증금을 가압류 하기에 이르렀다. '갑'을 사장님으로 모시던 이들은 분노했고, 노예가 아닌 당당한 건설노동자로 우뚝서기 시작했다. 합법적인 4. 10. 총파업을 시작으로 여의도, 당산철교의 노숙농성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노동자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다. 투쟁의 과정에서 10여명이 구속되고, 벌금형을 받았지만 투쟁의 열기는 사그라들줄 몰랐고, 검찰의 사업주 무혐의 처분에도 투쟁의 대한 패배보다 건설노동자로서의 다부진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이 땅의 자랑스러운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 할 줄 알고, 투쟁 할 줄 알게 된 것이었다. 중도에 생계의 어려움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 했지만 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명동성당 72일간의 노숙농성을 시작으로 다시금 투쟁의 준비를 하고, 농성을 마무리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또 다른 투쟁의 출발을 했다. 특수고용직 레미콘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2년여의 기나긴 싸움속에서 이들이 얻은 것은 당연한 노동자로서의 의지와 단결력이며 이들이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1면에서 이어짐)까지 몇몇 농아원생들의 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이제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다. 농아원생들과 직접 부딪히는 것을 피해왔으나 더 이상 인내를 갖기 어려운 실정에 와 있다. 경찰에 고소, 고발을 포함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다"라며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작 자신들은 숨어서 농아원생들에게 싸움을 부치고 있는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것이다"라며 구제단축을 경고했다.

한편, 에바다연대회는 오늘 평택지청에 지난 28일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또 6일 오전 10시에 배후세력의 색출과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서울 경찰청(본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이와함께 같은 날 11시에도 평택경찰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철저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에바다 상황을 MBC PD수첩에서 계속해서 취재해 3월 14일 방송예정인어서 또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산**

김건수, 서울고법서 실형

서울고등법원 형사제5부(재판장 이종찬)는 5일 오전 10시 김건수씨에 대해 공소사실 제1항(한총련 대의원 - 이적단체 가입), 제3항(노동법 집회 - 집시법등)에 대해서 징역 6월, 제2항(대의원 자료집 -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에 대해서 징역2월을 포함, 총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과거의 한총련 활동을 이유로 결혼을 일주일 여 앞두고 구속됐으며 당시 검·경이 무리하게 구속수사해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각 10월과 6월의 선고를 한 바 있다. **다산**

국가의 테러를 방지하자!

'제2의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하는 각계 목소리 높아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이 쇄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달 안에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보위는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토대로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당초 법안을 대폭 손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제정 자체를 폐기하라는 주장을 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서 별반 기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중연대(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6일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반민주·반인권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며, 11일에는 '인권유린·국정원 권한 확대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선언문'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의 반대운동보다는 제정 전에 쟁점을 박아야 한다는 절박성 때문에 보다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그 실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대한변협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며, 테러의 개념과 범위가 애매하고 추상적이며, 테러방지법의 적용이 남용되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각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안 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테러방지'라는 빌미와 달리 '국정원의 권력 강화'란 또 다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산**

수원지역 국회의원, 미군기지 이전 반대입장 표명

수원시, 시의회 모두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

용산미군기지 수원이전 결사반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이성윤)는 지난 2일 수원시장, 시의회위원장,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수원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계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 것이 없고,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다. 수원이전은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판단한다'라며 일관적 내용에 머물렀다. 또 수원시의회 의장은 '국방부의 발표가 있으면 100만 수원시민과 함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수원지역 국회의원(모두 한나라당 소속)

들도 '원칙적으로 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한다. 현재 관계당국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수원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왔다.

공대위는 수원시, 의회, 일부의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자세를 비판했다. 공대위는 기지이전 반대 입장의 공개적인 선언을 요구할 예정이며 항의방문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 공대위가 2월 19일 공개질의서를 보내 같은 달 23일 모두 취합한 내용이다. **다산**

다산 인권

제59호

2002. 3. 12.(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사회복지사의 복지가 문제다

사회복지노동자 주당 52.6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 '사이버 시위'

연일 발전노조의 파업과 공무원노조 논란으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는 지금, 조용한 투쟁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만을 강요당해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월 4일부터 2주째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및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자신들의 현실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게시판 '여론마당'란에는 지난 4일 이후 매일 수십건에 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글이 게재돼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시한 기초실태조사에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생활시설의 경우 주당 평균 64.7시간, 이용시설의 경우 48.6시간으로 전체 평균 주 52.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생활시설노동자의 71.8%, 이용시설노동자의 60%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형태가 2교대제(육아시설의 경우 24시간) 12시간 근무로 근로의 성격상 별도의 휴게시간을 갖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8시간 노동에 1간의 휴게시간도 주어져지 않고 있다. 결국 항시적으로 1일 평균 4시간의 연장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 수준도 공무원·교사 평균임금의 각각 68%, 63%, 제조업 노동자 임금의 89%수준에 불과해 현재 이들은 표준생계비의 72%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 하지만 정작 사회복지를 하는 우리들의 열악한 복지에 더 이상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를 느낀다"면서, "사회복지사들끼리는 정작 자신들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며 자조섞인 농담을 하곤 한다"며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을 토로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이준경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들은 노동권에서 철저히 소외된 사각지대에 서 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의 현실화과 필수

적이다"라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조합 준비위원회(위원장 장재구)는 지속적인 사이버시위를 진행하고 '사회복지노동자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 노동,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조건 개선운동과 함께 올해 9월경에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 건설을 목표로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산**

**새학기 경기지역 대학교
분규로 진통**

문제의 계단이 학내분규 원인제공

한세대(군포시)와 협성대(화성시)가 학내문제로 새학기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15일 한세대는 신임총장 취임식장에서 반대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2명 퇴학과 3명 유급정학 등 11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세대는 지난해 교수재임용 문제로 불거진 학내분규에 대한 교육부감사를 통해 가짜학위 남발, 불법(2면에서 계속)

(1면에서 이어짐) 임대 등 불법행위가 밝혀져 학생들의 유급직전까지 발생한 대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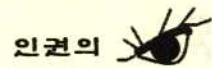
한세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각종 학내분규의 원인을 제공하고 지난해 문제로 중징계까지 받았던 김성혜씨(당시 부총장)가 학교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없이 총장에 다시 복귀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반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당시 순복음교회(신임총장이 조용기 목사의 아내임) 신도들을 동원해서 평화적인 집회에서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서슴치 않았다"며 대학측의 무리한 징계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협성대는 노조의 총장퇴진, 각종 비리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장기파업을 하자 이에 대응해 극단적으로 직장폐쇄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대학측은 용역요원을 동원해 각종 대자보와 현수막을 철거하며 위력을 사용하자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용역요원들과 총장, 총무처장을 학교밖으로 내쫓아내고 현재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협성대 또한 지난해 친인척 교수채용, 총장 공금유용 등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는 등 여러 비리 등으로 학내분규를 겪었던 곳이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매년 수많은 대학에서 재단의 비리와 밀실행정으로 학내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역설했다.

한편, 경기대 등 10여개 총학생회 연합단체인 경기남부총련은 3월16일 오전 11시 수원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등록금 문제, 학내분규, 사립학교법 문제 등 제반 교육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선]



공존과 인정을 위한 첫걸음, 이름을 부른다는 것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 윤재훈

국제적인 페미니스트 저술가 캐더린 맥키넨은 현대인권의 원리적 기반을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른바 '주류의 인권관'에서의 평등은 '뒤섞이고 주변환경과 구별되지 않고 차이가 없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권리라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인권관은 추상적 인권의 평등과 현실적 인민의 평등사이의 차이와 긴장을 들춰내고 없애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핏줄을 나누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더 그렇다. 오죽하면 생명의 원천인 물보다 진한 피라고 했겠는가. 짐작을 했겠지만 한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아무리 뒤섞여 있어도 확연히 구별되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생존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중인 김정환씨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덜어주고 나눠준다는 의미에서 <사랑>이며,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다르다. 이들은 무척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공식적으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기술연수생 등으로 불리우고, 비공식적으로는 야, 임마, X새끼, XX놈 등 그들에겐 아주 친숙한(?) 이름으로 불리운다.

사랑하면 많이 부르는 이름이지만, 아무리 들어도 정겹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사랑스럽지 않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일정한 거리도 필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고, 일방적인 잣대로 상대방의 삶에 마음대로 간섭하게 되니 말이다.

오늘도 택시에서, 식당에서, 전철에서, 거리에서 아니 천오백리 금수강산 곳곳에서 참으로 심란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을 것이다. 나이가 많은 적든 상관없다. "야, 이리와봐.", "야, 너 몇 살이나", "너희들은 휴지 안 쓴다며?" 앞으로 어지간하면 외국여행 삼가고, 부득이 나갈 양이면 몸조심해야 할 일이다.

에바다복지회 이사회, 에바다사태 공식입장 표명

12일 오늘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이사장 윤귀성)은 폭력을 치닫고 있는 현 에바다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정부기관은 구재단측의 불법점거와 폭력행위를 방조하고 오히려 에바다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며 평택시와 경찰서를 강력

히 비난했다. 이사회는 '결코 소중한 장애인시설의 문을 닫게 할 수 없다. 지역 시민들과 에바다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며 모범적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떠한 폭력 등 불법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천명했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김철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집회신고를 해놓고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구재단측 사람들은 또다시 4월 13일까지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태다. [이선]

다산 인권

제60호

2002. 3. 19.(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공무원노조, 24일 출범

정부 '불법간주 단호저지' 충돌 불가피, ILO 공무원노조 인정 권고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의 공무원노조의 인정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3월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이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눈앞두고 정부의 불법규정 강력저지 방침으로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나와 또다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잠정권고안을 마련한 ILO 집행이사회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한국의 공무원 노조설립과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권을 향유해야 하는 모든 범주의 공무원들에게 결사의 자유권을 확대하고 노조설립 및 가입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난해 5월 유엔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도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제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6일 전공련과 다른 또다른 조직인 대한민국의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하 공노준)의 노조출범식 장소를 원천봉쇄하고 위원장 등 10여명을 불법행위자로 규정, 검찰에 통보한 상황이어서 24일 열릴 전공련의 노조결성식도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경기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대표

논평

에바다 폭력, 그 배후세력을 수사하라

지난 16일 농아원생 10명이 한 밤 중 해아래집을 급습한 뒤 졸업생 두 명을 집단 폭행했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교사의 팔목을 비틀고 짓겨 부상을 입었다. 이날 해아래집을 쑥대밭으로 만든데는 불과 10분도 채 안 걸렸다.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폭력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참다못한 신임 에바다 이사진들은 이번 주부터 '차라리 나를 때려라' '우리는 농아원생들과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고 호소하면서 쇠사슬로 굳게 닫혀 있는 농아원 앞에 섰다. 더 이상 농아원생들의 폭력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결의였다.

최근 일련의 농아원생들의 폭력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방영된 MBC PD수첩에서 "선배가 시켰다"는 농아원생의 말과 한밤 중 해아래집을 급습하기 직전 사전 모의를 했다는 점만으로도 폭력을 주도하는 배후세력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농아원생들의 폭력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뒤에서 농아원생들의 폭력을 조직하고 선동하는 세력을 밝혀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농아원생들의 폭력을 막는 길은 배후세력으로부터 이들을 떼어내는 것이다. 또한 배후세력을 밝히는 것은 6년째 파행을 거듭해오고 있는 에바다 사태를 정상화시키는 최우선의 길이다.

배후세력을 밝히는 것은 마땅히 경찰의 몫이다. 그런데 그동안 평택경찰서측은 폭력행위를 막아 달라는 에바다 이사진들의 요청을 외면해왔다. 16일 한 밤중의 폭력사태는 그동안 경찰이 법을 무시하고 극에 달하는 폭력을 일삼고 있는 구 재단측 직원과 일부 농아원생들을 방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에바다 사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길은 바로 농아원생들의 폭력을 지휘하고 있는 배후세력을 수사하는 것이다. 평택경찰서는 더 이상 이들 폭력세력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가 20일부터 평택경찰서 앞에서 점심 집회를 갖는 이유를 경찰측은 똑똑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1면에서 이어짐) 있을 예정인 전공노조
대집행부 선거에서 사무총장에 전 경기
련 대표인 오산시직협 김원근 회장을, 부
위원장에 수원시직협연합 허인숙 대표를
입후보시키기로 만장일치로 추천, 의결했
다. 그리고 새로운 전공노 경기본부장에
경기도청직협 남윤수 회장을 추천한 것
으로 알려졌다.

오산시직협 박형모 사무국장은 "현재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 건설이
대세인 분위기다. 따라서 정부의 탄압에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공무원
노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수원시직협 관계자도 "공무원노조는
내부의 부정부패 감시기능이 가동되어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공무원 자
신들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이며 이로
서 성숙된 민주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기
대를 나타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국제기준 권고를 거부하지
말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라
며 정부의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인
정을 촉구했다.

전공노 결성을 지원하고 있는 민주노
총은 이번 결성식을 90년 전노협 창립대
회 수준으로 전 조직을 가동해서 치밀한
대책을 세우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 강력
한 사수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법외노조
의 협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다산**

미군기지 이전 결사반대로 경기도 들쭉

국방부 애매모호한 답변 일관, 지역단체 반발 거세

국방부가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수원이전 결사반대를 위한 공대
위(준, 집행위원장 이성윤)에 각각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답변을 보내와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국방부는 경기도에 "용산미군기
지의 도내 이전설은 근거없는 이야기다
"라고 밝혔고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
정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
성남시에도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성
남이전 결정된 바 없고 3월중순부터
6월말까지 한·미간 공동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수원공대위(준)에도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입장에서 추진
하고자 하오니 범국민적 차원에서 이해
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내용으로 일관해 지역단체들로부터
거센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용산미군기지이전이 강력하게 거론되
고 있는 4,000여명의 성남·송파 주민들
은 지난 16일 '미군기지이전 결사반대 범
시민결기대회'를 열고, 최근 국방부의 성

의없는 답변을 규탄하면서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대책수립 등을 강력하게 요
구했다.

한편, 수원공대위(준)는 지난 18일 수
원시장 면담을 통해 수원이전반대의견과
수원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수원시장은 "용산미군기지가
수원에 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
서도 안된다"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
다.

수원공대위(준)의 이성윤 집행위원장은
"그간 어정쩡한 입장으로 일관하였던 수
원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
소하고 향후 용산미군기지 수원이전과
관련하여 명확한 반대입장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수원시는 면담자리에서 뿐만아
니라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수원
시의회 차원의 용산미군기지 수원이전반
대결의안 채택을 통해 의회의 강력한 반
대입장을 국방부와 주한미군 당국에 전
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공대
위(준)는 매주 수원 남문에서 금요일집회를
진행하면서 서명운동 등 미군기지이전
반대여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다산**

외노협,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중지 촉구

정부의 이주노동자 합법화 추진방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이주
노동자 인권유린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
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공동대표 최
의팔외, 이하 외노협)는 19일 서울 종로
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
을 통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공개하고 △연수생 강제적
립금제 폐지 △정부차원의 피해자 진상
조사△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성폭력 위협
대책수립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8일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체계의 반대로 논란이 있었던 외
국인 노동자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근로
자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
국인인력제도를 도입해 산업연수생 제도
와 병행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여부에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불법체류자가 국내 외
국인력의 78%(25만8천명)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다산**

□계시관□

◇ 민주노총 경기본부 제4기 지도부 이취임식

· 일시: 3월 21일(목) 오후 6시
·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
지사 강당(6층)

◇ '발전소 매각 저지·전력주 권 사수' 파업투쟁 승리 문화제

· 일시: 3월 23일(토) 오후 3시
· 장소: 원정리 평택화력 사택

다산 인권

제61호
2002. 3. 26.(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정부의 초강경, 총파업으로 맞선다

민주노총 긴급대의원대회에서 4월 2일 전면총파업 돌입 결의

최근 정부와 발전회사의 발전노조 조
합원에 대한 초유의 대량해고 방침에 민
주노총이 2차 연대 총파업으로 맞설 것
을 결의해서 또다시 노·정간 정면충돌
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올림
픽 역도경기장에서 긴급대의원대회를 열
고 정부가 노조원 대량해고와 명동성당
침탈을 감행하면 4월 2일 오후 1시부터
전면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것으
로 알려졌다. 또 간부들 중심으로 27일부
터 철야농성에 들어가고 30일 오후 2시
전국동시다발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하
기로 해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적인 정면대결양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새벽 연세대 발
전노조 3000여명이 모여있던 농성장에 경
찰력을 투입, 이날 농성장에 있던 민주노
총당 수원시 권선지구당 김현철 위원장(현
수원시의원) 등 500여명을 연행했다.

또 이날 서울에 상경하지 못한 300여
명의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수원 아주대
에 결집했으나 경찰이 투입돼 50여명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했다. 이에 경기남부
총련 대학생 등은 수원남부경찰서 앞
에서 조합원 석방을 요구하며 강제연행에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심한 몸
싸움으로 일부가 119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날 경기지역 각 대학에는 전시를 방불
케할 정도로 경찰병력을 배치해 불심검

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소속 노조원은 "정
부가 무리한 법 집행을 통해 발전노조를
코너에 너무 몰아세우고 있다. 이제 정부
는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
부의 성의있는 사태해결지를 촉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23일 당초 24일로 예
정된 출범식을 하루 앞당겨 고려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출범식에서도 경찰병력
이 행사장소를 난입해 대의원대회를 중

단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련 소속 남윤수 경기
도청직협 회장 등 6명을 포함한 200여명
이 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2명
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
다. 또 이 출범식과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출범식 참석자를 징계조치하라는 방침을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는 물론 각
자치단체마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한편, 공무원 경기공대위와 전공노 경
기도본부는 공동으로 27일 오후 3시 경
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
탄압중단을 촉구하며 공무원노조 합법화
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 다산인권포럼 안내>

"지역에서 인권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인권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인권이슈를 공론화하고
실천하는 장으로 월례 '인권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과연 진보적 인권운동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운동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는가? 또 다산인권센터는 어떠한 역할과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 수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포럼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자 합니
다. 또 여러분의 비판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일천한 지역 인권운동의 작은 몸부림의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4월 4일(목) 오후 7시
- 장소 : 다산인권센터 회의실
- 참석자 : 인권과 다산인권센터에 사랑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
- 문의 : 031-213-2105 (노영란 상임활동가)

의경실명 구속 대학생, 실형 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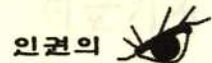
경기도경, 민중대회 관련 경원대학생 연행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정덕모)는 시위진압 의경의 눈을 찔러 실명케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권도씨(20·K대수원캠퍼스 1년휴학)에게 실형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에서 "비록 우발적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실명으로 인해 한 젊은이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어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씨는 선고이후 곧바로 항소했다. 현재 그는 올해 서울소재 K대에 합격한 상태이고 이번에 실형선고가 나와 휴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종로공원에서 전국민중연대(준) 주관으로 열린 '제2차 전국 민중대회'에 참가,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다 이를 막던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정모의경(20)의 오른쪽 눈을 나무막대로 찔러 실명케 한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 3월 11일 검찰로부터 구형 5년을 받았다.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수십 명이 수배 내지 구속된 상태이고 지난 23일에도 지난해 민중대회 관련해서 경원대 학생이 연행되어 의정부 소재 보안수사대에 서 조사를 받고 있다. [더시]



인권의 안되는 것도 될 수 있는 것

허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몇 년 전 마사회 해고자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의 해고가 억울하다며 눈물로 하소연한 기억이 난다. 당시 해고사유가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주장이기에 해고자들은 더욱 억울함과 배신감을 맛보아야 했다. 젊은 나이에 마사회에 입사하여 50이 넘도록 청춘을 바쳐 일해왔건만 결과는 정리해고란 네글자가 이들의 인생에 중지부를 찍게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마사회가 제시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별은 생계유지 가능정도, 장기근속자 등으로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를 선별하였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이었다고 주장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법원 역시 마사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후 몇 년이 지난 며칠 전 마사회의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살생부 명단이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귀신은 자신이 걸어간 족적을 남기지 않지만 인간은 자신의 족적을 남긴다는 생각이 든다. 즉 마사회의 정리해고는 귀신이 아니라 인간이 하였기 때문에 그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김대중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발전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사회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마사회의 정리해고 과정 및 이러한 언론 보도를 보고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당시 마사회 정리해고자들이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파업이라도 하였다면 발전노조에 대한 입장도 같이 마사회의 구조조정이야말로 시장경제의 원칙이고 이를 부정하는 해고자들의 요구는 시장경제논리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을 것이다.

이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보다는 과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천했던 정책들이 현재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를 겸허히 점검하고 수정할 때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진정한 미래의 비전이라 할 것이다.

다산인권

제62호

2002. 4. 2.(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두껍아, 헌집 즐겨 세집 다오?

연합토지관리계획 경기도민 조직적 반발, 대규모 경기도운동본부 구성예정

지난 3월 29일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미군기지반환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왔다. 특히나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로 수원, 성남 등 지역시민들이 조직적으로 결사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평택, 의정부 등지에 미군기지 공여지를 추가제공하게 되어 있어 경기도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LPP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경기도지역 시민들의 대응을 정리해보았다.

▶ LPP 배경 및 내용

미군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 계획은 현재 미군이 지상군과 재래식 전력위주로 돼 있어 첨단화하기도 힘들고, 기동성도 떨어지며 시설이 낡고 비좁아 주한미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미군을 효율적으로 지휘·통제하기 위해 향후 10년동안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고, 시설도 개선해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MD 미사일체계 구축과 한국의 반미감정 달래기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계획이 처음 언론에 알려진 것은 2000년 5월이지만, 미군이 처음 제안한 것은 1999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였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7월18일에 이 제의를 받아들여 한미간에 2011년까지 주한미군 공여지 4천만평을 연차적으로 한국에 반환하고 한국은 대형기지 주변토지 75만평을 사들여 미군

에 제공하기로 밝혔다. 또 같은해 9월 6일에는 반환하겠다는 땅이 훈련장 3천934만평과 서울, 의정부 같은 도심에 있는 미군기지15-20곳 144만5천평을 합쳐 4천44만5천평으로 구체화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SCM에서 합의각서에 서명한 뒤 공식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그 서명이 한두차례 미뤄지다가 이번 3월29일에 4천11만4천평을 반환받고 154만평을 미군측에 제공하는 내용에 최종서명하기에 이르렀다.

▶ 경기도지역 대응

• 평택 : 이번에 발표된 내용중 실제 평택이 추가공여할 땅은 전국 154만평중 반에 가까운 74만평이다. 왜냐하면 오산공군기지(송탄K-55미군기지)는 사실상 명칭만 오산일뿐 평택(서탄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평택 평성 K-6 미군기지 주변 24만평 등 총 74만평을 새롭게 미군기지로 내줘야 하고 2008년까지 신장동 소재 A/B 탄약고 13만여 평을 반환받도록 되었다.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30일 오전 10시에 평택역 광장에서 '미군기지 74만평 평택 확장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평택의 곡창지대와 주택가 74만평이 확장되는 것을 반대하며,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여지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파괴와 소음피해 등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향후에 대책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의정부 : 의정부 참여연대를 비롯한 의정부시민대책위는 지난 3월31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토지를 추가제공키로 한 LPP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투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달말까지 5만명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주민투표 조례제정청원서를 제출하고 미군기지반대를 위한 1인시위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소극적인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남 : 우리땅 되찾기 성남시민운동본부(상임본부장·김준기)는 지난 30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성남이전 결사반대를 위한 시민참가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한 시민참가단에는미군기지 이전반대 서명운동 과정에서 (2면에서 계속)

< 다산인권포럼 안내 > "지역에서 인권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02년 4월 4일(목) 오후 7시 - 장소 : 다산인권센터(수원지방법원 정문앞 법전빌딩 313호) - 참석자 : 인권과 다산인권센터에 사랑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 - 문의 : 031-213-2105 (노영란 상임활동가)

게시판

- 엠네스티 한국지부 30주년 기념식 및 30년 약사 출판기념회 - 일시 : 2002년 3월 28일(목) 오후 6시 /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문의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053-426-2533)
- 이주여성인권연대 1주년기념 정책토론회 - 일시 : 2002년 3월 29일(금) 오후 2시 / - 장소 :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 206호(02-6364-2200)
- 희망의 매화나무심기 운동 - 일시 : 2002년 3월 31일(일) 오전 10시 / - 장소 : 화성시 매향리 쿠니사격훈련장 부근 - 주최 : 매향향기 그윽한 매향리를 꿈꾸는 문화예술인 모임(031-224-9119)

(1면에서 이어짐) 자발적으로 원서를 작성한 일반시민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대시민 홍보 캠페인 등 각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운동본부는 현재 3천명의 서명참여 인원을 30만명까지 늘리는 한편 이번 달부터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와 오는 5월 대규모 시민문화제도 준비하고 있다.

· 수원 : 용산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거론된 수원은 그동안 준비위원회 등의 활동을 마감하고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33개 수원지역 계층교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미군기지 수원이전 결사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식을 오는 13일 오후 2시에 갖고 본격적인 미군기지이전 반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원공대위 관계자는 "미군기지관련 발표 때마다 관련 지역에 따라 일회일비하는 모습은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다. 미군기지문제는 이전이나 축소 또는 통합 같은 방식으로 풀어진 안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반환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LPP 협정을 계기로 매항리대책위를 포함한 수원, 평택 등 경기도 지역의 미군기지관련 단체들은 오는 11일 오후 3시 다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가칭) '주한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와 우리땅되찾기 경기도운동본부'를 구성, 대규모적인 미군기지만환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산**

한총련 대의원 수배학생, 부모앞에서 강제연행당해 한총련 대의원 10여명 구속중

시민단체들이 한총련 합법화를 요구하며 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한총련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지역에서는 연일 한총련 대의원 학생들이 연행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월31일 오후 3시 30분경에 서울노원경찰서와 경기도경 보안수사대 요원들이 아주대 학내에 들어와 부모님에게 학교구경을 시켜주던 김용희씨(2001년 아주대 동아리연합회장, 사회학과 98학

에도(哀悼)의 단상
"오늘 밤 모든 이름없는 유색여성들을 위한 문이 열렸습니다"
영글로 색슨계를 위한 동네잔치였던 아카데미가 의외의 결과를 발표하자, 전세계의 유색인종들은 할베리와 덴젤워싱턴만큼 감격했다. 자신들의 관대함을 자축하면서 주류 인종이 함께 흘린 눈물까지 합치면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어떤 영화보다 진지하고 스토리 라인이 튼튼하며 마지막 반전까지 훌륭한 헐리우드식 휴먼 드라마였다.
헐리우드가 아끼는 스티븐 스피버그가 흑인여성의 삶을 다룬 '컬러퍼플'로 아카데미의 문앞에서 좌절한지 16년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
그런 아카데미가 웬일인지 74년만에 흑인여성에게 여우주연상을, 39년만에 흑인남성에게 남우주연상을, 게다가 시드니 포에티에에겐 특별공로상까지 쥐어주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앞으로, 오늘처럼 아카데미가 개과천선해서 공평무사한 시상식으로 만인을 기쁘게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수상으로 아카데미가 그동안 부러왔던 상식이하의 횡포와 야만, 그들만의 잔치에 머물렀던 불협화음의 정체를 만천하에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만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만의 사회에서 노예의 굴레를 벗고 소수할당제의 수혜를 입고, 문화예술의 꽃으로까지 등장한 이들에게는 같은 유색인종으로써 영광의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 한 사회의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헐리우드에서 성공하기 보다 힘들다고 말한다. 보편적인 삶의 진행경로에 편입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현실은 가혹하기 그지 없다.
얼마전 한 여성장애인인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지독한 우리 사회에 등을 돌렸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같이 자살하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홀로 살아가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에게 월 26만원의 생계급여는 너무나 잔혹했다. 국가에게, 또 그 국가가 주는 노골적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이들 빈곤한 이웃은 이미 이방인이 돼 버린 지 오래다. 사실은 훨씬 많은 다수가 이미 이방인이 되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인지도 모른다.
몇 십년만에 주는 상 같은 것은 요란한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다. 늘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명정대한 시스템과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감시하는 눈이 훨씬 더 필요하다. 장애인이란, 외국인이란, 동성애자란, 가난하다는 이유는 이제, 만인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빛나는 권리가 되는 일만 남았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번)를 강제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김씨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개월 동안 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날 아침 김씨 부모가 아들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에게 연락해 함께 가서 연행하자고 회유했으나 이를 거부한 부모를 미행한 뒤 학내에 들어와 김씨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연행했다.
곧바로 아주대 학생 80여명은 신병이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 찾아가 김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이날 오후 9시가 되어서야 자진해산했다. 김씨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나 구속영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 9기 한총련 대의원활동 등으로 연행된 학생들 중 탈퇴서를 제출하고 풀려난 학생을 제외한 이효진(경기대), 황규관(경원대), 황중환(외국어대), 류수현(서울농대), 이정호(아주대) 등 10여명이 구속되어 재판이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다산 인권

제63호
2002. 4. 9.(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hanmail.net

한총련 이적규정, 이젠 그만!

한총련 범사회인대책위, 한총련 강령개정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

지난 97년 김영삼 정권 당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뒤 대의원 구속 등 한총련에 대한 탄압과 이적성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어 온 가운데 오는 5월 10기 한총련 출범을 앞두고 이적단체 논란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9기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 부분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바꾼 데 이어 이번에는 '미제반대' 등 반미 강령도 수정·완화할 계획으로 알려져 공안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한총련은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강령을 일부 개정했으나 검찰은 '여전히 반미나 국가보안법 등 북한 주장을 추종하고 있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법원도 '9기 한총련이 일부 강령을 바꿨지만 조직의 체제나 활동내용 등이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적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일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10기 한총련과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주최로 한총련 강령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한총련 운영회 대변인은 "한총련이 더욱 더 국민들에게 다가서고 각계 어른들의 고언을 듣기 위해 공개적인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대중적인 언어와 구체적인 내용을 조항마다 명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강령개정의 기준을 설명하고, "여성, 인권,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반영해 새로이 강령에 첨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며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승교 민변 변호사, 송영길 민

“민주당, 테러방지법에 목숨걸었나?” 민주당, 테러방지법 4월 임시국회에 수정안 마련 통과입장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수정안을 마련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어 시민사회진영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 내용과 관련, 인권침해와 국가정보원 권한 확대 등 강한 문제가 제기되자 국정원의 수사권과 계좌추적권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정안은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가 지명하는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당초 규정을 삭제하고 테러예방을 위한 정보활동에 치중하는 것으로 센터의 역할을 제한했다.

또 모호한 규정되었던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를 '국의테러조직 또는 반 국가단체와 연계해 사람의 신체·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혹은 '테러 또는 테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단체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 등으로 고쳤다.

주당 국회의원,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정명수 전대협 동우회 회장, 정지환 월간 '말' 기자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들 토론자들은 모두 "한총련이 강령 및 규약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변화의 의도가 담긴 큰 결심"이라고 격려한 뒤 "한총련 이적규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안당국의 낡은 사고와 편협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를 강하게 촉구했다. **(2면에서 계속)**

하지만 인권단체 관계자는 '지난번에는 한시법으로 한다고 연막을 치더니 이제 는 부분적인 손질로 수정안을 마련해 은 근슬쩍 넘어가려는 처사'라며 민주당의 행태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법안폐기를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4일 이만섭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게 테러방지법(안)의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현재 한나라당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테러의 개념규정이 모호할 뿐 아니라 검·경의 수사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여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8일부터 임시국회가 개시됨에 따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낮 12시부터 오후1시까지 민주당사 앞(또는 국회)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전국민중연대(준)도 오는 10일부터 민주당사 주변 미주빌딩 앞에서 '테러방지법 개정 반대' 피켓팅을 겸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1면에서 이어짐)이날 공청회에는 현역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참여해서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총련이 보다 전향적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통해 합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총련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단위 학생회들의 토론결과를 폭넓게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영남대에서 개최되는 대의원 대회를 통해 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총련 소속 관계자는 "6.15 공동선언과 이번 특사방문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시점에서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박우석씨(경기지역 통일운동가)는 "한총련이 상당히 변화하는 것 같아 호뭇하다"면서 "한총련 합법화운동이 서울뿐 아니라 경기지역에서 공론화되어 확산되었으면 한다"며 합법화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밝혔다. 또 박 선생은 "이는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을 가늠하는 문제"라며 시민사회의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인사 600여명이 참여한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만길 등 7명)는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정부는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한총련 이적규정 전면철회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수배해제 및 관련자 석방 △올해 결성되는 10기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산**

인권의 위험한 학교길

박영운 변호사

지난 29일 수원지방법원은 수백 명의 주민들로 때아닌 북새통을 이루었다. 철도청이 화성시 병점에 있는 우남·한일 아파트 주변에 철도기지장을 건설하면서 주민 1048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주민들이 소환을 받고 법정에서 출두한 것이다.

현재 철도청은 병점역 주변에 철도기지장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청은 공사를 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던 학교 길은 없애고 경사지고 비좁은 임시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도로는 기지창 진입철로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1번 국도와 안산시화·반월공단을 잇는 길이며 한 낮에도 대형 화물차, 컨테이너 차량, 레미콘 차량들이 질주한다. 사람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도로가 아닌 까닭에 교통안전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 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물론 어른들조차도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도로이다.

이에 주민들은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며 공사현장에서 한 달 넘게 집회를 벌였다. 철도청이 최소한 안전한 통학로라도 먼저 마련해 달라는 요구조차 묵살하자 지난달 6일과 7일에는 자녀들의 등교거부까지 감행한 것이다.

철도기지장의 건설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고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 공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대형사고의 위험 속에서 학교를 다니도록 방치하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 아이들의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 즉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이곳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조)고 공언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도 소중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생명의 소중함은 사람의 생존터전이 올바르게 지켜질 때 보장된다.

과연 우리는 오늘도 대형차량과 숨바꼭질하면서 위험천만한 공사 현장가로질러 다니는 어린아이들에 대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을 졸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생태다리까지 만들어주는 이 시대에...

게시판

- '지방화 시대의 NGO와 언론의 역할' 학술회의
 - 일시 : 2002년 4월 11일(목) - 장소 : 오산 한신대 60주년 기념학술과 국제회의실
- 가칭) '주한미군기지 신설·확장반대와 우리땅되찾기 경기도운동본부' 구성을 위한 간담회
 - 일시 : 2002년 4월 11일(목) 오후 3시 - 장소 : 다산인권센터 회의실
- 용산미군기지 수원이전 결사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 일시 : 2002년 4월 13일(토) 오후 2시 - 장소 : 수원 팔달문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신고 캠페인
 - 일시 : 2002년 4월 13일(토) 오후 12시 - 장소 : 수원 팔달문

다산 인권

제64호

2002. 4. 16.(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수원공무원노조 조합원, 수원시청 앞에서 30일까지 1인시위

지난 3월31일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출범이후 행정자치부가 주동자에 대한 징계방침을 내려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일 전공노 공정거래위원회지부 정용천 회장이 파면이 되어 공무원노조 관련자중 첫 징계자가 발생했다.

특히 행자부는 전공노 부위원장급은 중징계, 그 이하는 경징계하도록 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에서는 전공노 부위원장인 허인숙 수원시지부장과 김원근 오산시지부장에 대해 중징계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허인숙 수원시지부장은 오전 8시부터 '공무원노조의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1인시위에 들어갔다. 허 지부장은 유인물을 통해 '90만 공무원의 염원인 노동3권의 회복'을 위해 1인시위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원시지부는 앞으로 30일까지 노조집행부와 조합원들이 번갈아가면서 1인시위를 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공무원노조 탄압에 공동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공노는 수원을 비롯해 마산, 부산 등 전국각지에서 각 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공노 출범과 관련해서 현재 차봉천 위원장, 정용천 비대위 위원장, 고평식 전 사무총장, 이용한씨에게 체포 수배

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자는 김영길, 설남술, 김병진, 고평식, 노명우 등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지도부는 현재 부평 산곡성당에서 거점농성을 전개하면서 집행부 구성 등 나머지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이후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공노는 그 일환으로 27일 전국동시다발 공무원노조탄압 규탄결의대회를 갖고 각 공무원노조의 지역조직 창립대회를 갖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인권포럼 두 번째 마당>

"그녀의 죽음에 공소시효는 없다"

- 수지 김 사건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문제 -

1987년 1월 수지 김은 남편 윤태식으로부터 살해당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남편과 안기부에 의해 간첩사건으로 조작돼 발표됐다. 사건 발생 13년만인 지난해 수지 김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간첩조작사건으로 진상이 밝혀졌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지 김 사건을 은폐·조작했던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가 없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지, 수지 김 가족들을 모시고 함께 따져본다.

- 일 시: 4월 26일(금) 오후 7시
- 장 소: 다산인권센터 회의실(수원지방법원 정문 앞)
- 강 연: 수지 김 가족, 이창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문 의: 노영란 상임활동가 (031-213-2105)

장애인의 날은 차별철폐투쟁의 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기획단 장애인 7대 요구사항 기자회견

지난 15일 오전 11시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89개 장애인·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철폐를 촉구했다.

공동기획단은 기자회견문에서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치러지는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에도 불구하고 장애자에 대한 구조적 폭력과 차별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기본적 인간의 권리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사회구조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기획단은 이 자리에서 ▶노동권(장애인의무고용제도 확대,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확대) ▶이동권(지하철 승강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 ▶교육권(교육기관 증설, 특수교육 예산증대 등) ▶참정권(공직장애인할당제 등) ▶수용장애인 기본적 인권보장(수용시설비리철폐, 에바다 문제해결) ▶장애여성 인권보장(장애여성폭력방지법 제정, 교육 및 고용기회 평등보장) ▶빈곤·실업장애인의 최저생계 보장(장애수당 현실화, 국기법 생계급여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공동기획단 참여단체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의 날은 정작 장애인은 관객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몇몇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잔치로 전락되었다"며 "장애인의 날을 우리들의 문제를 함께 요구하고 실천의 날로 다시 되찾아오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기획단은 이날 선포식 이후 오는 20일까지 대학로와 종묘공원 등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766-9101/ www.420.or.kr

<논평> 국가인권위를 진정합니다?

며칠 전 국가인권위는 '제천시장의 보건소장 장애인 임용배제'를 이유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결정하고 제천시시장에게 구제조치를 내렸다. 지난 11월 국가인권위 출범과 함께 진정 1호 사건으로 접수된 지 5개월만의 일이다.

그 구제조치 내용은 제천시시장에게 엄중 경고하고 제천시의 행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고 앞으로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건 능력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장애우에 대한 차별을 깨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조치는 진정인의 진정요구(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 게재등)에 따른 구제조치가 실질적이지 못한 채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훈계에 그쳐 따가운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진정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정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결국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권한의 구속력에 대해 의구심을 받아 온 국가인권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자체적인 구제조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국가인권위의 적극적인 의지마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조치결과가 현행법상 행정처분의 무효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법과 제도의 한계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인권위나 인권단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혹 제천시장이 어느 개그프로처럼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권고는 권고일 뿐, 새겨들지 맙시다'로 받아들여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지나친 기우이기를 바란다.

4. 20 장애인철폐투쟁 공동기획단 투쟁 일정안내(16일 - 20일)

- △ 16일 : 13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및 거리 선전전(종묘공원/ 오후 2시), 장애인이동권토론회(서울대/ 오후 7시)
- △ 17일 : 장애인의무고용외면 삼성계별 규탄대회(남대문 상공회의소/ 오후 2시), 장애인차별철폐문화제(대학로/ 오후 7시)
- △ 18일 : 에바다문제해결과 장애인 시설비리철폐 결의대회(종묘공원/ 오후 2시), 장애인중 투쟁영상전(대학로/ 오후 7시)
- △ 20일 : 장애해방운동가 정택수, 최옥란 열사 추모문화제(종묘공원/ 오후 1시),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종묘공원/ 오후 2시)
- △ 16일 - 19일 : <시민과 함께하는 거점선전전> (오전 10시 - 오후 8시), △ 15일 - 20일 : 전교조와 공동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현실에 대한 교육.

다산 인권

제65호
2002. 4. 23.(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adasan@hanmail.net

집배원노동자, 안전사고 사망자 5년 동안 117명

비정규 집배원노동자 장시간노동으로 고통, 노동기본권 보장 시급

집배원들이 하루평균 14.4시간의 장시간노동으로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집배원노동자협의회의준비위원회(이하 집노협)가 전국 13개 우체국의 집배원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매달 우편물량이 폭증하는 10일~25일까지는 각 우체국마다 우편물량이 적체돼 퇴근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샘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장시간노동과 피로누적으로 인해 96년부터 2000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순직자가 173명이나 발생했고 그 중 집배원이 115명을 차지, 1년에 2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응답자의 45%가 오토바이 및 차량사고의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그 중 9.3%만이 산재 혹은 공상으로 처리해 사고예방이나 사고 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드러났다.

또 시간외 근무수당조차 응답자의 79.4%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체불규모가 4천억원으로 추정되어 또다른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밝혀졌다. 더욱이 집노협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자 우체국 및 체신청은 출퇴근 카드기록지를 없애버리기까지 했다고 밝혀 심각한 근로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집노협에 따르면 98년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진 이후 우체국 현업 인력 5천명이 감축되고 그 자리에 상시

위탁, 시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충원돼 비정규직인 상시위탁집배원의 비중이 20% 이상인 집배관서가 전체의 31.4%에 달할 정도로 비정규직 집배원들이 상시적으로 우체국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에 참여했던 민중의료연합의 배영희씨는 "집배원노동자들은 비정규노동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비정규직 철폐와 정적인력배치, 장시간노동 철폐가 절실한 실정이다"며 집배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편, 집노협은 24일 오후 2시 철도노동회에서 '집배원노동자 노동실태와 건강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본격적으로 집배원노동자들의 노동실태들을 고발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집]

학교는 신문지국, 교사는 신문배달부?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204개 분회, 소년00일보 구독거부선언운동 전개

"학교에선 아침시간에 학생들에게 어린이 신문을 구독하라고 하는데 억지로 보라고 할 수도 없고... 청소용역을 하려면 많은 학생들이 신문을 구독해야만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어린이 신문을 많이 보라고 강요(?)할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거부운동을 해야 하나요?"

전교조 경기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어린이 신문구독과 관련해 난감한 현실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관행처럼 어린이 신문구독을 종용해 물의를 빚던 사건이(본지 2

001년 5월 16자)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 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는 23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어린이신문 구독거부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204개 분회도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 관행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교장들의 묵인과 동조 아래 수십년간 지속돼왔다"고 지적하고 어린이신문의 구독권유, 배포, 대금 수납을 거부하기로 결의하는 '학교에서의 소년00일보 구독거부선언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안양시 교육청의 조사 결과 안양·과천시지역의 40개 초등학교 중 32개 (2면에서 계속)

< 다산인권포럼 두 번째 마당 >

"그녀의 죽음에 공소시효는 없다"

- 수지 김 사건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문제 -

- 일 시: 4월 26일(금) 오후 7시 다산인권센터 회의실
- 강 연: 수지 김 가족, 이창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문 의: 노영란 상임활동가 (031-213-2105)

(1면에서 이어짐) 학교가 특정 어린이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학교측은 신문 1부당(월 구독료 3500원) 20%인 700원을 신문지국으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사례금(리베이트)으로 받아 학교화장실 청소용역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서도 전교조와 함께 학교당국에게 소년조선, 동아, 한국일보의 강제구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부모단체는 '이런 행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무시되는 처사다'라며 "개별적인 구독거부는 현재의 관행을 바꿀 수 없으므로 학교가 기부금을 목적으로 하여 대기업 신문사의 안정적인 이익 추구를 담보해주는 역할을 다 이상 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나서 즉각 강제 구독 행태를 중시시켜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 학부모는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구독하는 것이 상식인데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의아할 뿐이다. 교사들이 적극 나서서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안티조선운동처럼 번지게 해서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박수를 보냈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시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중에 '어린이 신문은 감사원도 정부도 손을 못 대는 일'이라며 이면에 신문사의 압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전교조 및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교원노조는 단체협약에 어린이신문의 강제구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권의 진보적 인권운동을 생각하며

김삼석(군사평론가, 수원신문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인권운동은 한국의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진보적이다. 인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지만 한국에서의 인권 운동은 다른 나라와 차별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분단된 현실이다. 사회 전반을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이다. 민족과 사회 전체를 억누르는 분단과 국가보안법 덕택에 각종 미군, 인권, 노동, 주택, 교육, 육아, 언론 문제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견고하고 있다. 당연히 진보적 인권운동은 분단과 국가보안법을 이겨내는 인권운동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에 주목해왔다. 열심히 해왔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보할 수밖에 없다. 우리 현실에 맞는 진보적 인권운동이라면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에 주목한 인권단체들은 한때 국가보안법 제 7조의 반인권적인 측면에 주목했다. 원인은 7조 위반 적용자가 많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제일 반대하는 것이었고, 구명을 먼저 내자는 작전이었다.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비현실적인 '진보적' 인권운동의 한계다.

진정 진보적 인권운동이라면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체계와 화살은 분단유지를 위한 민중탄압에 있기 때문이다. 50년 동안 보안법 적용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사법살인 되거나 고문 당해죽는 등 그 인권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법 위반자의 피해사태에 사후 약방문하는 수동적인 인권운동이 아니라 분단 뒤 보안법 위반자들이 확산범으로서 무엇을 외쳐 왔는가에 주목하고, 그들과 같이 외치는 적극적인 인권운동이 필요하다. 즉 통일에 보탬이 되는 인권 운동이 진보적인 인권운동이다.

필자는 일제 시대에서 만약에 인권 운동을 전개했다면 우선 순위가 무엇이였을까를 생각해 본다. 우선 철저하게 민족 해방에 보탬이 되는 인권 운동이었어야 한다고 본다. 민족이 처한 현실에서 모든 민족이 무엇을 갈구하고 싸웠는가. 당시에 분명 민족의 권리 찾기보다는 집단의 권리 운운하며 백화점식 권리 찾기를 했을지라.

지금 인권운동이 문을 두드려야 할 사안은 많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부족한 일손으로 일을 해내는 과학적인 세계관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2의 독립운동인 지금의 자주·민주·통일에 보탬이 되는 인권운동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리라. 인간의 권리와 함께 민족의 권리를 찾는 문제는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동시에 군사적인 주권, 경제적인 주권을 찾는 모든 이의 밥그릇 문제이자 인권이기 때문이다. IMF의 결과는 진보적 인권운동을 제대로 하라는 반면교사다.

-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 일시: 4월 24일(수) 오후 7시 / 장소: 서울 종로성당 2층 강당 / 문의: 02-741-5363 (유혜정)
- 주한미군기지 신설·확장반대와 우리땅 되찾기 경기도운동본부 발대식 기자회견 및 100만 경기도민 서명운동 선포식
 - 일시: 4월 26일(금) 오전 10시 / 장소: 경기도청 정문 앞
- 공무원노조 탄압저지와 합법성 쟁취 수원지역공동대책위 출범식
 - 일시: 4월 27일(토) 오전 10시 / 장소: 수원시청 앞
- 세계노동절 112주년 기념 경기도 노동자 마라톤대회
 - 일시: 4월 28일(일) 오전 10시 / 장소: 수원 장안공원 / 민주노총경기본부(031-226-0908)

게시판



다산 인권

제66호

2002. 4. 30.(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전공노수원지부 2일 천막농성 돌입

'고용직공무원 고용 승계' '지부장 중징계 철회' 요구, 수원공대위도 29일 기자회견문서 공무원노조 인정 촉구

공무원노조에 대한 수원시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수원지부(이하. 전공노 수원지부/지부장. 허인숙) 전국에서 처음으로 5월2일부터 수원시청에서 '고용직 공무원 구조조정 철회' '지부장 중징계 처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공노 수원지부는 지난 15일부터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과 활동보장' 등 5개 요구사항을 내걸며 수원시청 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수원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29일 경찰병력을 동원하면서 시장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는 "수원시 지부를 인정할 수 없다. 제 갈 길로 가자"며 최후통첩을 해왔다.

이날 오후 수원지부는 공무원노조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수원시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5월1일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뒤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허인숙지부장은 "수원시장과의 면담을 수 차례 시도했으나 시의 회피로 무산됐다"면서 "고용직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 투쟁과 공무원 노조 인정 등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 경기지역본부도 현재 다른 지역과 달리 가장 심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 수원지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출범한 수원지역 17개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및 합법화 쟁취를 위한 수원공동대책위'(집행위원장. 이상호)도 29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결정 등의 구조조정 즉시 철회

경기지역 대학생 70% 공무원노조지지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학생위원회, 96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경기지역 대학생의 74%가 공무원의 노조결성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72%는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 산업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학생위원회(건)가 경기도 소재 9개 대학의 대학생 969명을 대상으로 정치의식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학생 71%가 이번 12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지지 정당으로는 민주당(22%), 민주노동당(12%), 한나라당(7%)순이었으며 응답자의 58%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로 57%가 진보적 성향, 26%가 지지하는 인물이 있어서라고 답변했다. 낙선 또는 퇴출시켜야 할 정치인으로 이회창 한나라당 전

△전공노 수원시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결정 즉각 철회 △수원시지부 요구 사항에 대한 전면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 하면서 천막농성에 함께 하기로 했다.

현재 수원시는 허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 절차를 밟아가고 있으며 부시장까지 결재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고용직 공무원 36명 전원에게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고용직 공무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총재가 응답자의 57%로 가장 많았고 이 인제, 김중필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이번 대선에 지지하고 싶은 후보는 응답자중 69%가 노무현 후보라고 밝혀 '노풍'이 젊은 유권자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노동당에 대한 생각은 응답자의 52%가 취지는 좋으나 수권능력이 없는 정당이라고 답했고, 미국상품의 불매 운동에 대해서도 57%가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 조사는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학생위원회(건)가 지난 1일부터 9일 동안 직접 면담을 통해 '경기지역 대학생 정치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1학년 332명, 2학년 294명, 3학년 200명, 4학년 120명, 학년 미기재 23명 등 총 969명이 설문에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인권포스터전

어린이날을 맞아 인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

- 연제: 5월5일 ~ 5월11일
- 장소: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출 전시관
-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인권침해 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

국가인권위법 1주년 기념 토론회서 인권위 한계 집중 거론돼

오늘 30일(화) 종로성당 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인권사회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25개 인권사회단체가 주최했으며, 국가인권위 유시춘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60여명이 참여해서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국제민주연대 "사람과 사람에게" 편집위원장인 유시민씨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가인권위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법 시행령을 중심으로'(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견해'(김용익 서울대 교수), '인권 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운영에 대한 견해'(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를 주제로 한 발제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발제자들은 대부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5개월 동안의 한계를 비판적 시각으로 지적했다.

특히 인권의 비공개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운영의 문제점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 노력의 부재, 사후구제조치 미흡 등 국가인권위법이 안고 있는 법률적 취약점들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곽노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비판에 동감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처럼 더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선의를 키우는데 도움을 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유시춘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가 부여된 법 한계 내에서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인정하며, 위원회 내부의 토론을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한 많은 인권사회단체 활

동가들은 위원회가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사무처장의 일정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남 거제에서 올라온 대우조선 노동자 이의씨씨가 인권위에 계소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불인정과 관련한 회사측의 탄압과 차별행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산**

대법원, "96년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정치 파업도 정당한 해고사유 아니다" 판결

지난 26일 대법원 특별2부(대법관. 유지담)는 1996년 12월26일 국회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파업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김순종씨(당시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사건 상고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인용, '이 사건 파업이 사용자들 상대로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도모코자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하,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노동관계법 폐지 내지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와는 구별되며, 노동관계법이 국회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통과됨에 따라 당시 이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던 데다가 소속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서도

호남석유화학(주)를 포함한 각 단위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관계법 개정 반대하는 무기한 연대파업에 돌입하도록 결의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이 사건 파업에 이르게된 점, 또한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96년 노동법 개악저지 파업투쟁 이후 회사측과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문제삼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어기고 노동법 개악저지 파업 후 1년이 지난 98년 1월5일 유일하게 김씨만 징계면직했다.

이 판결은 정치적인 결정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된 문제라 한다면 이를 순수한 정치적인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다산**

이번 주 게시판

- ◆5/1(수) 오후 2시 노동절 집회(여의도 문화마당)
- ◆5/3(금) •오전 10시 전농 경기도연맹 "WTO 쌀 개방 반대, 대북쌀 조기지원 및 통일 쌀 보내기 전국투어단 전담식 및 기자회견, 선전전"(수원역)
- 오후 4시 용산미군기지 이전반대 수원금요일집회(수원 밀레오레 앞)
- ◆5월3일(금) 오후7시 수원차의제(정책과제) 작성을 위한 워크샵 (경기문화재단 6층 회의실)
- ◆5/5(일) 오전 10시 수원지역 어린이날 행사 •오후 1시 인권포스터전(수원청소년문화센터 - 11일까지)

다산 인권

제67호

2002. 5. 7.(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다른 월드컵을 준비하자

국내의 노동인권단체, 아동노동 철폐 등 월드컵 캠페인 예정

국내의 노동인권단체들이 2002년 월드컵 개최기간에 한국기업의 제3세계 노동자 착취를 폭로하고 아시아 노동자들의 공동대응을 위한 '월드컵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아시아모니터자원센터(AMRC),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동맹(APWSL) 한국위원회,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의 공동제안으로 월드컵 캠페인에 함께 할 한국측 단체들이 10일(금) 오후 4시 안국동 느티나무에 모여 첫 회의를 갖는다.

월드컵캠페인을 공동 제안한 단체들은 제안문에서 월드컵 행사가 다국적 기업과 정치인들의 선전장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장으로 만드는 세계인들의 진지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예로 월드컵 열기가 뜨거운 유럽의 네덜란드와 독일은 물론 공동개최국인 일본에서도 스포츠 의류, 신발 제조업체에서의 노동자의 비인간적인 문제와 착취공을 만드는 아동노동에 대한 고발, FIFA에 대한 고발 등 각종 캠페인과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에서의 월드컵 캠페인은 스포츠 상품을 제조하는 제3세계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와 아동노동 철폐,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노동착취 고발 등을 핵심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한국측 기획단이 구성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7일 '월드컵 캠페인'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28일에는 '해외주재 한국 초국적기

업과 노동자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 토론회에서는 스포츠 상품생산과 한국해외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필리핀 등 아시아국가 노동자들을 초청해 그들의 노동현실을 직접 들어 본다. 이를 토대로 각국 한국기업의 모니

터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및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은 제3세계의 아동노동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거리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니세프 한국지부도 이번 월드컵을 '세계평화아동축제'로 정하고 한국 스카우트연맹과 함께 28일 세계 각국 어린이 250여명을 초청, 6박7일 동안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평화와 어깨동무' 한마당을 진행한다. **다산**

외국인노동자 차별을 반대한다

공대위 6월말까지 외국인노동자 차별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시민사회단체와 외국인단체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7일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외국인노동자차별철폐 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개선대책」과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이 외국인력정책을 오히려 왜곡시켜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혼란만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비판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그 대안으로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철폐 ▲외국인노동자고용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 제정 ▲미등록노동자 사면과 합법적 노동권 부여 ▲이주노동자

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 이주협약 비준을 요구했다.

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대위는 5월7일부터 6월말까지 각 지역별로 캠페인을 벌여 전국적인 범국민 서명운동(인터넷 서명은 <http://www.jcmk.org>)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 서명을 취합해서 입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4일, 21일에는 민주당사와 한나라당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건물 앞에서 수도권집중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지난 3월12일, 두 달간의 기간을 설정(3/25 ~ 5/25), 자진신고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최장 1년의 합법(2면에서 계속)

세계인권포스터전

- 언제; 5월 5일(일) ~ 5월 11일(토)
- 장소;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출 전시관
-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1면에서 이어짐)자격을 부여하는 「불법체류자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92년부터 94년까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6개월씩의 비자발급을 4차례 연장하며 여러 번 불법체류방지대책을 실시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점을 들어 시민사회로부터 이번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아왔다.

미 상공회의소 점거농성 구속자 14명 전원 석방

미 상공회의소 점거사건으로 구속된 이효진등 3명의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14명 모두가 풀려났다.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는 2월18일 미상공회의소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이효진(경기대 97학번), 황중환(한국외대 96학번), 황규관(경원대 97학번)학생의 선고공판이 있었다.

형사 제11부(재판장 정덕모)는 이효진, 황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황중환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는 지난 2월 18일 미상공회의소 점거와 한총련 9기 대의원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됐다.

또 북한원산농대와 서신교류를 하겠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류수현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태현(법무법인 다산)변호사는 "미 상공회의소 점거문제는 차치하더라도 9기 한총련이 강령에서 연방제 통일안을 삭제하는 등 대중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한총련 학생들을 바라보는 법원, 검찰의 시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한총련의 내부적인 변화노력도 중요하지만 사법당국이 한총련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의 불법 양산하는 외국인력정책

윤재훈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실장

2002년 5월, 총성만 없었던 서로 먹고 먹히는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내쫓으려고 난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나가지 않으려고 난리다. 지난 3월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체류중인 모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2003년 3월 31일까지 출국할 것을 통첩하는 이른바 '자진신고'를 독촉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국내 실업난의 가중, 외국인 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어떻게든 한국땅에서 쫓아내려고 절치부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침을 내왔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업체 사업주도, 당사자인 외국인도 정부의 현실인식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설사 신고를 하는 외국인들도 1년 뒤에 귀국을 하겠다는 전제가 아니라, 1년이나나 고달프고 힘겨운 '불법' 생활을 피해보겠다는 미봉책으로 몇 킬로미터에 이르는 줄을 기다려 신고를 하고 있다.

더구나 법무부와 미등록 노동자간의 눈치싸움에 불법적인 브로커들만 희희낙락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우선 여권을 둘러싼 브로커가 판을 친다. 기한이 지났거나 없는 여권을 둘러싸고 일부 심지어는 대사관이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출국일시가 명시된 항공편을 둘러싼 브로커도 많다. 법무부가 환불이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발생한 브로커인데, 10-20만원을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발권해주고, 그것을 되파는 수법을 사용한다. 또 60-80만원이면 수속 일체를 알아준다는 일체형 브로커도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내년 3월31일 이후의 사태를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다. 그것은 설사 별도의 방침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신고자는 물론이고 출국유예신고를 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출국하지 않고 또 다시 미등록으로 국내에 체류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불법체류 미등록 외국인력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외국인력 취업과 고용의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자고 요구했으나, 몇차례 입법청원과 대통령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았고, 급기야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스스로도 한국정부에 대해서 '미등록노동자 사면화 혹은 합법화'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외국인력을 들여온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을 위한 외국인'을 고집하며 학명에도 없는 살색을 유지하려 헛된 꿈을 들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제 제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30여만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사라지면 그에 버금가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불법체류자들을 강제로 떠나라도록 하는 정책이 아니라 외국인력의 고용의 합법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주 게시판

- ◆5/10(금) 오후 4시 용산미군기지 이전반대 선전전(수원역)
- ◆5/11(토) 오전 15시 수원시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경기지역 결의대회 (수원 팔달문)

다산 인권

제68호

2002. 5. 14.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수원시장, 전공노수원지부장 해임키로

13일 심 시장, 허지부장 해임 결재 경기도에 올려, 전공노 수원지부와 수원공무원공대위 강력 반발

지난 13일 심재덕 수원시장이 허인숙 공무원노조 수원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결재에 서명했다.

이날 오후 심시장은 "공무원노조인정과 활동보장, 허인숙 담당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그동안 1인 시위와 함께 집단행동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허인숙 담당에 대한 징계문제를 가슴아픈 심정으로 정부의 방침대로 처리키로 했다"는 내용의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무원노조 수원지부와 수원공대위가 확인한 결과 심시장은 이날 허지부장 해임에 대한 중징계 서류에 사인을 했고,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로 넘긴 상태다.

이에 공무원노조 수원지부와 수원공대위는 "이미 울산과 광주 광역시에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했는데도 수원시장은 행자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둘러대고 있다"면서 허지부장을 해임키로 한 수원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허지부장은 "진정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데 이를 불법이라면서 부당해고를 하려 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허지부장은 현재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 집행부에 대한 행자

부의 징계방침이 떨어진 이후 현재 정용천 공정거래위원회 직협 회장이 지난달 12일 해임됐으며 전국적으로 8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이다.

<단상>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의 눈물 그리고 희망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었던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이 2000년 한겨울부터 시작한 517일의 파업투쟁을 눈물을 머금으며 접었다. 이들은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추웠던 정리해고의 칼날에 맞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며 시작한 파업에서 한 명의 동지를 저 세상으로 떠나 보내야 했고, 지금도 반신마비 상태로 병원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동지를 얻었다.

함께 싸움을 했던 동지들 198명이 구속되고 벌금과 손해배상액만 3억 2천만원에 이르러 돈벌이 없이 1년 넘는 시간을 버틴 조합원들은 모두 빗더미에 올라앉을 수 밖에 없었다. 정규직의 외면속에서 시작한 한강대교위 농성, 목동전화국 점거, 국회의원회관 진입시위등 일간지 사회면을 끊임없이 장식하는 투쟁들을 하며 이들은 수많은 이들에게 연대의 손을 벌렸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 할 수 없다'는 절망이었고, 정규직 동지들에 대한 서운함이었으며 우리라도 싸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이제 이들은 가슴아픈 투쟁을 접으며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이 비정규직의 현실에 대해 알리는 일을 한 것 같아 기쁘다. 비정규직의 현실을 알리는 끊임없는 절규들이 모여 비정규직 차별은 철폐 될 것이다"라며.

노동자들 50% 이상이 비정규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이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된지 이미 오래다. 내 자신이 언제 비정규직이 될지 모른다는 현실이 그 하나요, 비정규직의 양산이 가져올 노동자들의 약화될 힘이 그 둘째일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단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들의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노사정위에서의 특수고용직에 대한 논의 정도를 가지고 할 일을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여서는 안되며 비정규직 보호입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눈물과 분노를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송주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한번 한총련은 영원한 한총련 ?”

14일 또 한총련 관련 학생 구속,
16일 아주대에서 한총련합법화 문화제 개최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또다시 한총련 관련 구속자가 발생해 '실적올리기 수사'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새벽 6시경 한양대 캠퍼스내 언론정보대학 건물 지하에 잠자고 있던 이두행 학생(한양대)이 몇일째 잠복해 있던 경기도경찰청 보안수사대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이군은 지난해 한양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9기 경기남부총련 의장을 맡아 활동을 한 이유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남부총련 학생들이 14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보안수사대로 물려가 항의시위를 벌였으며 앞으로 경기도경보수대 규탄과 한총련 이적규정 부당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한총련 활동으로 연속해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학생은 모두 3명으로 알려졌다.

그중 장모 학생은 지난해 9기 한총련 대의원 활동으로 활동하던 중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탈퇴서를 제출해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 하지만 장모 학생은 탈퇴서 반복 선언을 하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올해 4월 경에 다시 구속됐다.

올해 김모 학생도 9기 한총련 활동으로 연행되었으나 검찰에 탈퇴서를 제출했고 이례적으로 구속취소가 결정돼 풀려났다. 김모 학생은 나중에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사건은 비슷한 유형의 한총련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한명의 구속자는 전모 학생으로 5기 한총련 활동으로 6년동안 수배생활을 하다 5월 초에 구속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전모군의 경우 한번 붙은 한총

련 딱지가 계속해서 따라다녀 10기 한총련 합법화와 9기까지의 학생들에 수배해제가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6일 아주대에서는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한총련 문제를 지역에서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난 한총련 출범식 이후 6월 1일에는 경인총련 출범식이 예정되고 있어 한총련 합법화의 진전이 없는한 또다시 한총련 구속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산】**

수원지역 청소년 인권지수는 얼마?

5월 청소년인권의식 및 인권침해 설문조사, 7월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 공모 사업, 11월 청소년모의법정 행사 이어져

다산인권센터는 5월 한달동안 수원지역 중고등학교 청소년 3천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의식 및 침해사실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수원지역 청소년들의 청소년 침해실태를 파악해 인권단체는 물론 전교조, 청소년단체들간의 공동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교육 현황 그리고 가정, 사회, 노동, 사회, 학교 등 각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리내용과 그 침해 정도를 파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6월 말경에 지역 청소년관련 단체 및 기관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와 토론회는 앞으로 수원지역에서 청소년 인권활동과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첫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다산인권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소년모의법정 대본 공모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나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법정이라는 형식을 빌어 역할극을 마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이나 내용, 형식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6월 말경에 공고할 예정이며 우수 공모당선작은 11월 학생의 날에 직접 학생들에 의해 모의법정이 무대에 올려진다. **【다산】**

게시판

- ◆5/14(화) 11:00 수원환경한마당 회의(수원환경운동센터) / 11:00 청소년인권실태 설문조사(농생고)
- ◆5/15(수) 11:00 청소년인권실태 설문조사(동성여중,청명고) / 14:00 최저임금 관련 회의(민주노총 경기본부)
- ◆5/16(목) 10:00 월드컵캠페인 회의(국제민주연대) / 16:00 수원어린이한마당행사 평가회의(수원청소년문화센터)
17:00 한총련합법화 문화제(아주대)
- ◆5/17(금)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15:00 평택시청 앞) 및 문화제 개최(19:00 평택역 앞)
10:00 청소년인권실태 설문조사(숙지고,대평고,매원중) / 16:00 용산미군기지 반대 금요일집회(수원역)

다산 인권

제69호
2002. 5. 21.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발전노조 인권침해 조사나서

인권단체, '발전노조 공동조사단' 구성해 16일부터 조사 착수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0여개 인권단체들이 발전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몇차례 내부회의를 거쳐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각지의 사업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회사측의 탄압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는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인권단체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왔다.

이에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3시 명동성당에서 첫 회의를 갖고 '발전노조 파업 관련 인권단체 공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여 공동행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단은 그동안 발전노조에서 진정 또는 제보받은 상황을 근거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회사측, 경찰, 피해조합원, 조합원 가족들을 상대로 직접 면담조사할 예정이다. 또 5개 발전회사(전국 31개 지역 발전처)중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이번 주부터 조사를 벌여 6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곧바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단에 참여하는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상임활동가는 "파업철회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행해지는 회사측의 폭압적 행태를 도저히 바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발전회사측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조사는 발전회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을 인권단체 차원에서 공동조사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향후 노동현장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단체의 대응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사의 의미를 밝혔다.

지난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대우자동차 노동자, 가족,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과 국제민주연대가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 보고서를 내고,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상당수 인권단체들이 공동참여해 노동현장에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자와 아동의 노동착취를 고발한다.

공동행동, 27일부터 아시아노동자 초청해 월드컵캠페인 진행

2002 FIFA 월드컵을 후원하는 스포츠 초국적 기업의 노동 착취 현실을 고발하는 캠페인이 열린다.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10여 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자·아동 노동 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기업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스포츠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성인 및 아동노동자 15명을 초청해 '스포츠 다국적 기업과 노동자의 현실'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들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과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28일 공개토론회를 연다. 또 수원과 고양, 구미지역에서 지역 순회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현재 2002 월드컵의 공식적인 스포서로 16개 브랜드, 15개 초국적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우리에게 익숙한 맥도날드, 아디다스, 코카콜라 등이 있으며, 아시아 초국적 기업도 7개나 된다. 이들 초국적 기업들은 제3세계에 현

한편, 발전노조는 지난 2월24일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가 파업 37일만인 4월2일 타결되면서 현장에 복귀했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해임, 고소고발, 급여나 계산 가압류 등으로 노조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모든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기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전회사측은 간부들을 동원 협박과 회유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다수의 지부에서 조합원들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어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다산】**

지 공장을 세운 뒤 혹독한 노동환경에서 이들 지역의 노동자와 아동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80USD 판매가격인 나이키 운동화를 생산하는 중국 노동자는 한시간당 20센터를 받고 있으며, 맥도날드 판매장에서 일하는 파키스탄 노동자는 빅맥 하나를 사기 위해 14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

공동행동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스포츠 다국적 기업이 자행하고 있는 부당한 노동착취 현실을 알리고, 이후 제3세계 노동자와 연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수원지역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아시아 노동자 7명을 초청해 그들의 노동현실을 직접 듣는 간담회와 가두 캠페인을 벌인다.

또한 수원에서 경기가 열릴 때마다 '아동노동 반대, 스포츠 다국적 기업의 노동자 착취 반대' 캠페인과 아동노동 사진전 등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다산】**

< 월드컵 기획기사 > ①

월드컵이 노동자 생존권 제한할 수 없어

(편집자주) 월드컵 개막이 10여일 남았다. 언론이나 개척 지자체는 연일 월드컵 열기를 북돋기위해 난리가 아니다. 하지만 화려한 월드컵 이면에 드리워진 인권 현실은 그리 화려하지는 않다.

'주간 다산인권은 이러한 월드컵 열기에 편승해(?) 월드컵의 그늘에 가리워진 월드컵의 실체를 <4화>에 걸쳐 고발하고자 한다.

월드컵을 불모로 삼는 노동자?

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기간산업 사유화 중단과 산별교섭 수용 등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집중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든 언론은 연일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 똑같은 논조로 '월드컵을 불모로 하는 파업은 안된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불온시하고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작년 이맘때도 '가뭄에 웬 파업이냐'며 무슨 사회악처럼 떠들더니 이번에는 월드컵 그림 내년에는 또 무엇으로 파업을 막으려 하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며 언론이나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 이 관계자는 "4년 전 프랑스월드컵때에도 월드컵공식 후원사인 에어포스항공사 조종사들이 전면파업을 단행했고 프랑스 철도기관사노조가 파업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행사는 무리없이 진행됐다"며 파업으로 인해 월드컵이 망쳐질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의 집단협쟁의시기에 관해서는 10여년동안 자연스럽게 6월 전후로 집중돼 왔던 것이고 민주노총은 월드컵 개막 이전인 5월 하순으로 집단협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사용주의 미온적인 교섭으로 월드컵 시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컵 축제에 피눈물나는 노동자

결국 주 5일 근무제, 구속수배자 문제 등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나 집단협을 해체하는 사용주의 그릇된 현실인식이 노동계의 파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속·보건의료·택시노조의 경우 사용자가 집단협의 산별교섭을 외면하여 석달째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해왔으며 2년전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보건복지부가 묵살하는 바람에 23일 파업에 돌입하는 사회보협노조도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수원지구협 관계자의 "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사용자들이 노동부 지시를 제대로 따르려 하지 않아 곤혹스럽다며 하소연하고 있다"는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민주노총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5월 현재 김대중 정부하에서 구속자는 모두 751명으로 632명이던 김영삼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고소고발자들이 무려 1천384명에 달하고 발전노조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가압류 등의 전체 액수는 1천67억5천만원이며 징계해고자만 해도 1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산술적 수치는 현 정부의 반노동자적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 몇차례에 걸쳐 정부에게 노동계와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음에도 현 정부가 아무런 진전된 내용을 내놓지 못하는 것 역시 정부의 노동정책능력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누가 우리의 생존을 대신할 수 있는가. 누구를 위한 월드컵이냐. 월드컵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수원에서 열린 5.18기념집회에 참석한 한 노동자의 절규는 2002년 우리 노동자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다산]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입법청원"

13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회'(이하 사회단체협의회)는 21일 오늘 오전 국회에 '반인도적범죄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청원했다.

이번에 청원한 특례법의 주요골자는 △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범죄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 국가공권력의 증거조작 및 사실발견 은폐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지속되었던 기간 동안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삼청교육대 사건과 청송교도소 사망사건 등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범죄들이 '공소시효'의 벽에 막혀 올바르게 처리되지 못했다"며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된 대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사법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하며 특례법 제정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 '수지김 사건'의 진상이 폭로되면서 당시 사건조작과 은폐를 주도했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안기부 수사관들의 범죄행위가 드러났지만, '공소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어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인권단체들이 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3월 초부터 4월말까지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대국민서명운동과 거리캠페인을 벌여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오늘 입법청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다산인권

제70호

2002. 5. 28.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수원30%이상, 최저임금위반사업장

공동감시단, 수원지역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실태조사 발표

민주노총 수원지구협의회 등 수원지역 1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수원·용인·오산·화성지역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공동감시단(이하 공동감시단)은 28일 오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지역에서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감시단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378곳 중 32%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으로 규정되고 있는 시간당 2,100원(월급 474,600원)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주지한 사업장은 전체 조사 대상의 11.8%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조사대상 PC방 업체의 63.6%가 평균 시급 1,800원에서 2,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용실의 58.1%, 편의점의 33.3%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업주나 종업원은 20.1%였다. 야간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의 가산임금을 주는 사업장 역시 2.5%에 불과, 이들 노동에서의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지켜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대 보험 적용여부를 볼 때, 산재 가입 사업장은 전체의 27%, 고용보험은 27%, 의료보험은 19%, 국민연금은 16%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4대 보험에서도 저임금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방치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 수원지구협의회 장혜진 법규팀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인지도가 극히 낮고, 위반 업체에 대한 노동부의 관

리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음을 이번 실태 조사를 하면서 여실히 느꼈다"면서 노동부의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또 장부장은 "현재 최저임금법은 사실상 임금억제수단으로 작용하며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현

경기도민은 미군기지 이전과 확장을 반대한다

경기도운동본부, 경기도민 10만명 서명운동 경기도의회에 전달

지난 5월24일 오후 2시 수원시민회관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신선훈장반대와 우리땅되찾기 경기도운동본부(이하 경기도운동본부) 주최로 '미군기지 없는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주한미군기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6.15 선언이후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강정구 교수의 발제, 대항리 문제와 주한미군이 미치는 환경적,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월 용산미군기지의 수도권 이전과 LPP 발표로 불거진 미군기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여서 관심을 모았다. 또 이날 공청회에서 경기도운동본부는 '주한미군기지 신선훈장 반대와 우리 땅 되찾기 경기도

실태를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동감시단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6월8일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 등 미지급 임금찾기 운동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동감시단 참여단체들이 지난 1월부터 5월에 걸쳐 현수막 등 홍보를 통해 방문면담과 전화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민 100만 서명운동과 조례제정운동'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운동본부는 28일 오전 11시 4월 중순부터 진행되어온 10만명의 서명운동을 경기도의회에 전달하고 경기도의회가 미군기지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정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아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용산미군기지 수원이전 결사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국방부에 송파, 성남의 용산미군기지 이전반대 공대위와 함께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관은 만날 수 없고, 기획국장과 면담을 할 수 있으나, 6월 발표이전에는 어떠한 책임있는 답변도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며 면담을 거부해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다산]

아동노동반대! 월드컵 캠페인

- 언제 : 5월 29일(내일, 수) 오후 2시 - 6시
- 장소 : 수원소재 남문, 경기불교문화원
-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월드컵 기획기사 > ②

“추악한 아동노동에 레드카드를”

「15살인 인도 소녀 소니아는 고된 노동에 어린시절을 저당잡힌 2억5천만명의 어린이들을 대표해 지난해 5월에 일본에서 열린 '월드컵 캠페인 2002 : 전세계에서 아동노동을 없애자' 행사에 참가했다. 7살 때 시력을 잃은 소니아는 그때부터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법을 배웠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청중들 앞에선 소니아는 불구가 되어버린 손을 내밀어 보였다. 그리고 호소했다. "제 친구들이, 제 동생들이 더 이상 축구공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학교에 가고 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제민주연대 '사람이 사람에게' 2002년 3, 4월호)

세계아동 6명중 1명은 아동노동착취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5~17세의 세계아동 약 2억5천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못한채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 아동 6명 가운데 1명꼴로 추정되며 세계 아동노동의 대부분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집중돼 있는데 아시아에는 2명중 1명, 아프리카에서는 3명중 1명, 남아메리카에서는 5명중 1명의 어린이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ILO는 전세계 1억8천만명의 아동이 매춘·건설과 같은 위험한 직종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ILO는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폐지 협약(182호)'을 마련해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으로 ▲노예 및 노예에 준하는 노동과 부채를 이유로 한 강제노동 ▲아동매춘 및 아동을 이용한 포르노그래피 제작 ▲마약류의 운반 및 제조 등 불법범죄행위를 위한 아동동원 ▲환경적으로 어린이의 안전, 건강, 정신을 침해하는 노동행위 규정하고 각 국가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또 올 5월에 열린 유엔아동특별총회는 아동노동과 인권을 보호하자며 소리높여 외치고 있으나 그 목소리는 갈수록 증가하는 전세계 아이들의 고통어린 신음소리보다 약한게 현실이다.

리보다 약한게 현실이다.

아동노동착취, 초국적기업이 부추겨

1998년부터 '아동노동 반대운동'을 벌여온 글로벌마치(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는 스포츠산업 특히, 축구관련 산업의 아동노동실태는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축구공의 경우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을 최상품으로 치기 때문에 국제축구연맹(FIFA) 공인구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스포츠메이커 아디다스는 인도, 파키스탄 등의 값싼 노동력을 특히,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세계여론의 비난을 받자 거액의 아동보호기금을 기부하고 공개해명의 대가를 치른 적이 있다. 하지만 글로벌마치에 따르면 현재에도 버젓이 비합법적인 생산처에서 '비(非)아동노동(child labor free)'이라는 로고가 붙어있는 축구공을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 노동착취 반대”

홍콩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AMRC와 '국제민주연대' 등 13개 노동·인권단체로 구성된 '노동자·아동노동착취 월드컵후원 초국적 기업반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드컵 후원 초국적기업의 노동착취 금지를 촉구했다.

또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축구공 등 스포츠용품 생산하는 초국적 기업의 어린이 노동착취실태와 관련해 “국제축구연맹(피파)은 관련기업들이 축구용품 생산에 어린이 노동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파키스탄 노동자 필립 로이는 파키스탄 시알코트 지역에서 아디다스 등 초국적 기업과 그 하청업자들이 경영하는 3500여개의 스포츠용품 생산업체에서 어린이 노동착취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의 노동자 임만 라마나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의류, 직물, 가죽가공업체와 스포츠 용품제조 업체에서도 어린이 노동착취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28일 오후 2시 '초국적 기업 착취에 기댄 월드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29일 오후 2시 수원소재 남문에서 수원지역 단체들과 함께 간담회와 월드컵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대신]

또 현재 한국에서 15만원에 팔리는 피노바 한 개의 가격에는 판매가의 0.1%에 불과한 약 1백50원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한 사람이 하루 4~6시간 동안 오각형, 육각형 모양의 32개 외피조각을 약 1천6백20여회의 바느질로 꿰매 공 한 개를 만드는 것이다.

10살~15살 소년, 소녀들이 하루종일 쪼그리고 앉아 12시간이상 작업해서 10개정도(숙련공)를 바늘에 손가락 찢리며, 지문이 지워져가며 바느질한 대가는 몇 천원에 불과하다. 다국적 스포츠메이커가 수백억원씩 쏟아붓는 광고비와 후원비 사이에서 이 아동노동의 비인간성은 외면당하고 있다.

현재 홍콩의 아시아모니터지원센터(AMRC)에서 초국적기업의 노동착취를 감시하는 활동하고 있는 김에화(44세)씨는 "제3세계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아동노동을 철폐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성인 노동자가 적정한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노동이 자행되는 것이며 아동노동이 비극적인 이유는 왜곡된 저임금 구조를 지탱하는 모순점이기 때문이다"라며 아시아국가에서 벌어지는 초국적기업의 아동노동착취 문제를 강력히 비난했다. [대신]

다산 인권

제71호

2002. 6. 4.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군부대 총기사망, 유가족 진상요구

군가협, 6월 군의문사규명과 군폭력근절 홍보의 달 행사진행

지난 5월25일 오후 11시45분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육군 00부대 해안초소에서 2인 1조로 경계근무 중이던 유모(20)이 병이 머리에 실탄을 맞고 신음하는 것을 함께 근무하던 김모(21)일병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발견 당시 유이병은 옆머리에 실탄을 맞은 흔적이 있었고 소지하고 있던 M16소총에서 실탄 한발이 없어졌다.

김일병은 "유이병을 밤 10시경부터 11시30분경까지 교육을 시킨뒤 혼자 칸막이로 분리된 공간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유이병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신음하고 있었다. 아마 초소 3층으로 혼자 올라가 자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자살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사건 당일에 친구들에게 휴가때 만나자는 메일을 보냈고 친형과도 안부전화를 주고 받았으며 타살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함께 경계근무를 서던 김일병과 동료 부대원 등을 상대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며 현재 함께 근무를 했던 김일병은 근무지 이탈과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됐다. 또 유이병이 소지했던 총과 탄피, 군복, 유이병 손바닥의 화약반응 등에 관하여 국방부에 감정의뢰한 상태이며 2~3주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가족은 인권단체와 함께 정확한 사인규명을 추구하고 나선 상태다. 유이병은 서울 S대학 1학년 재학중 지난 3월 입대했으며 자대배치 14일만에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

한편,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 근

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군가협)는 지난 5월28일 명동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한달을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 홍보의 달로 정했다. 군가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군의문사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시행할 것

△군의문사의 입증책임은 군에 있어야 하며 시민단체 전문가의 수사참여 보장할 것 △군의문사와 군폭력 예방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구하고 나섰다.

그 일환으로 5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군의문사, 군폭력 희생자 합동추모제를 갖고 20일 오후 2시에는 국회의 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최로 '징병제와 군의문사 국가책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대신]

미국이여! 페어플레이를 해라?

5일 수원 미국경기 맞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예정 - 초긴장상태

5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미국과 포르투갈의 첫 경기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 수원은 현재 초긴장 상태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경기가 열리는 5일 오후 2시 수원소재 88공원에서 3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신자유주의 미국반대·자주적 평화통일과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행동의 날' 선포식에 이어 행진, 월드컵 경기장 주변등 수원시내 곳곳에서 선전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현재 파업중인 경기,인천,서울,강원지역의 사회보험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한총련 대학생 등도 함께할 예정이다.

경찰당국은 월드컵 미국경기가 열리는 날이고 올해 들어 최대규모의 집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노총은 거리선전전을 위해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집회신고를 내놓았으나 경찰측은 반경 1km 이내라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피켓시위를 하면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이 '페어플레이'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에게 옐로, 레드카드 배포 등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월드컵 수원경기장 일대에서 만일의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날 1차적으로 대테러 예방임무를 끝마친 뒤 경기가 열리는 5일에는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경찰병력 3천여명을 경기장 주변에 투입해 검문검색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아동노동반대! 월드컵 캠페인

- 언제 : 6월 5일(수) 오후 2시 - 5시
●장소 : 수원소재 팔달문 중앙극장 앞
●문의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월드컵 기획기사 > ③

노점상에게 월드컵은 고통컵

요즘 박모씨(42)는 심란하다. 지난 몇년동안 수원소재 팔달문 주변에서 떡볶이 노점상을 해왔지만 지난해 수원시가 월드컵 정비사업을 이유로 용역을 동원해 모두 철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호소도 해보고 싸움도 해보았지만 쫓겨나서 지금은 이곳저곳 행사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노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월드컵기간에 노점을 불법으로 막고 있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하지만 수원은 노점없는 아주 깨끗한(?) 도시가 되었다.

노점상은 축구공이 아니다.

길거리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노점상들에게 월드컵이 원망스럽다. 많은 사람들은 월드컵 특수를 예상하지만 노점상들은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월드컵을 전후해서 전국 주요도시에서 대대적인 노점상 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전국노점상연합(이하 전노련)에 따르면 지난 4월초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서는 철거용역업체 직원 등 단속반 200여명이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간이점포를 철거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노점상 윤모씨(26)를 마구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심한 타박상을 입었으나 도리어 연행중 형사기동대 차량 유리창을 깨고 의경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5년전부터 가족생계를 책임져온 윤씨는 너무나도 막막하기만 하다.

또 정모씨(33)는 지난 3월 부인과 함께 서울 동작구청 인근 거리에서 옷을 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임신 4개월된 부인이 유산을 했다고 밝혔다.

영세노점상들은 윤씨처럼 철거용역반에 걸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몸을 다치거나 상품을 압수당할까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거리에 난립한 포장마차와 좌판, 손수레, 보따리상 등 1만8천여명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 2가에서 6가에 이르는 2.5km 구간에 대해 노점상 규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서울시 12개 지역에 대해 노점상 '절대금지'와 '상대금지' 구역 등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올림픽(1988년)과 아시안게임(1992년), 아셈회의(2000년) 때처럼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아예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노점상을 추방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더구나 지하철 입구, 버스택시승강장, 횡단보도 주변 등에서 떡볶이, 봉어빵 등을 파는 생계형 노점상까지 모두 추방할 계획이다. 단속해도 버티면 도로 불법점유 과태료를 m²당 5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물린다는 것이다.

이제 노점상들은 물리적인 단속과 벌과금의 이중고통을 당해야 할 실정이다.

연례적 노점상단속, 근본대책 시급

하지만 노점상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서울도심에서 노점상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생존권 사수 투쟁대회' 등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

다. 또 6월19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보행권 침해를 이유로 철거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노점상측은 노점상 양성화(등록제)를 통한 영세민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해법찾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김민석 후보는 장기적으로 노점상등록제를 통한 양성화에 찬성한 반면 이명박 후보는 등록제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제한적 허용을 밝히고 있다.

노점상단체에서는 서울시에서 지난 3월26일 노점상정비안을 마련하면서 전업희망자에 대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도 등을 제시했지만 이미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기존대책만을 되풀이 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노점상단체 관계자는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노점상의 평균 연령은 47.2살이며, 40대 이상이 74.9%를 차지하고 학력에서도 저학력층인 중졸 이하가 43.5%에 이른다고 나왔다. 이 조사를 보더라도 노점상은 취업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높은 나이와 저학력이 절대다수다"라며 단속위주의 노점상 정책전환을 통해 되풀이 되는 폭력과 자살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다산]

“의의를 제기합니다!! 노점상이 불법이라 급쇼~”

전국노점상연합(의장 김홍현, 이하 전노련)은 6월11일부터 19일까지를 100만노점 총력투쟁 주간으로 선포하고 월드컵 개최를 전후해서 자행되는 정권의 대규모 단속에 대해서 용역강패 해체, 노점생존권 쟁취, 민중단합 분쇄를 위한 투쟁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노련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정부의 노점생존권에 대한 단속방침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노점상에게 드는 용역발주비를 민민들의 복지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에는 자율질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일에는 일산운동장에서 노점상 '일쭉' 대회가 진행되어 축구, 족구 등 체육행사가 개최되며, 이 주간내내 종로, 신촌에서 외국인 떡볶이 시식회 등 노점상 품물거리 문화 한마당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 마지막날인 19일 종묘공원에서 '제15차 6.13투쟁정신 계승, 용역강패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백만노점 총력 투쟁대회'가 열릴 계획이다. [다산]

다산 인권

제72호

2002. 6. 11.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소수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인권사회단체들, 2002년 양대 선거 참정권 대응키로

6.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오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단체 연대회의(준)는 소수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가졌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국민 기본권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권리"라고 전제하면서 "그런데 현재 이같은 참정권의 행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이들은 지문날인 반대자, 재외국민, 재소자, 장애인,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체 사업장 노동자, 청소년들.

▲지문날인을 반대한 수천여명은 당장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하여 투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현재 이를 발급해야 할 일선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행정자치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발급을 못해주겠다는 상황이다. ▲재외국민들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210만여 명과 30여만 명의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단기 체류자들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부채자 투표기간 이후에 구금된 미결구금자들과 경찰단계의 피의자들까지도 투표가 제한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체, 서비스업체 노동자들 역시 근로시간 때문에 투표장에 갈 수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연대회의는 또 만 20세 이상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청소년

년들의 권리들이 침해받고 있는 것 역시 중요하게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전세계 93개국만 18세의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추세와 청소년들의 성숙한 의식에 비춰볼 때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OECD 가입국 중 재외국민들에게 부채

자투표 등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법적으로 참정권이 배제되거나 행정관청 부주의 등으로 인해 참정권을 제한당하는 경우들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즉각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 참정권의 침해를 받는 사례들을 수집해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제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산]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손배소 제기

국가인권위 진정1호 사건, 7일 공대위 피해자의 위자료 지급요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40여 장애인 관련단체로 구성된 제천시장애인차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7일 '장애'를 이유로 제천시 보건소장 승진에서 탈락시킨 제천시(시장 권희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 청구) ▲승진탈락무효소송(행정소송)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제56조 인권옹호 업무방해) 등 3가지형태로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을 통해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구체적 구제조치의 필요성과 철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소속 안선영 변호사는 "인권위의 첫 번째 숙제인 제천시장의 '장애이유 보건소장 승진배제'는 장애라는 이유로 이 땅의 수많은 장애인들이 수시로 당하는 장애차별이자 인권침해이며, 따라서 소송제기를 통해 잘못된 편견과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사건의 피해자 이희원씨가 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며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차별'로 명백하게 나온 만큼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공대위 소속 김용익 교수는 11일 제천시청 앞에서 부당인사조치 철거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나 선관위의 제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제천시장이 보건소장 승진 대상인 이희원씨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키자 국가인권위에 1호로 진정하여 지난 4월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차별'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사과문 게재, 손해배상, 부당 인사조치 철회라는 피해자의 진정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효성 없는 결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다산]

작은인권영화제가 다시 뜹니다.
●상영작: '박통진리교'(최진성 감독, 95분 다큐)
●언제: 6월 18일(화) 오후7시 / 장소: 다산인권센터 회의실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월드컵 기획기사 > ④

컵에 관한 집회의 자유

정부가 월드컵 기간동안 설정한 '특별 치안구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별치안구역'은 정부가 지난달 21일 '월드컵 기간에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파업과 집단행동을 엄중 처벌하겠다'며 월드컵 경기장 반경 1km와 선수단 숙소 600m 안쪽을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

헌법 위의 월드컵?

지난 5일 민주노총 경기본부(본부장 김상완)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 등 6~7 곳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신자유주의 미국반대·자주적 평화통일과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행동의 날" 선포식과 거리행진, 선전전을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전날인 4일 이미 설치되어 있던 단상을 경찰병력이 동원돼 해체시키는 등 집회와 거리행진을 막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수원월드컵 경기장을 관할하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민주노총 집회를 집시법 제5조 1항 2호를 적용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시법 제5조 1항 2호는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 정보과 담당자는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 사회보험노조 조합원이 대거 참여한다 과거 대우자판노조의 폭력집회 전례가 작용된 것 같다"며 "특별치안구역 내에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금지한 것은 아닌 것 아닌가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과거 전례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기존의 판례가 있다. 결국 특별치안구역이라는 이유가 집회 불허요인으로 작용했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로운 척(?)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대우자동차판매노조가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신청한 67곳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1인시위까지 금지해 지난 3일에는 서울 0호텔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던 대우자판노조 조합원을 강제연행하기도 했다.

다산인권센터의 노영란 상임활동가는 "특별치안구역은 경찰청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기본권 침해"라며 경찰의 자의적 법 적용을 지적했다.

월드컵기간에 정부의 이같은 인권침해가 우려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의견을 국무총리, 행정부·법무부·노동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의견서에서 정부의 '대회 관련 시설 특별치안구역 설정 운용'과 관련하여 "월드컵 대회 기간 중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축소되어서는 안되며 특별치안구역 운용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인권위는 중복신고 집회에 대한 무조건적 금지통고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월드컵 기간 중 집회 및 시위가 보장되고 현장에서 인권보호가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권위원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인권현장확인반'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지난 1일(민중연대 집회)과 2일(외노협 집회) 집회현장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외국 손님에 대한 예의와 국가 이미지 차원이라는 명분아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모든 국민이 '평화로운 척' 해야 하는 이런 현실은 말도 안 된다"며 "월드컵 축제는 축제일뿐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산]

"전동록씨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해 7월16일 경기도 파주시 뇌조리에 있는 미군 부대 CAMP Howze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전동록씨(당시 53세)가 미합중국 제2사단 공병여단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2만2900볼트 고압선에 감전 당해 양팔과 다리를 절단한 채 11개월 동안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 결국 지난 6일 세상을 떠났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장례위원회는 10일 오전 고양시 소재 일산 병원에서 영결식을 갖고 미 대사관 앞에서 노제를 지낼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저지로 한동안 대처하다 결국 파주시 미군캠프에서 노제를 지낸 뒤 벽제 화장터로 향했다.

미군은 전씨 사건에 대해 한미행정협정을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전씨에게 겨우 6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사과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시민들의 분노를 받아왔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11월경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건축주를 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 재판이 계류중이며 다음 재판은 7월18일 오전 10시 서울민사지법 357호에서 있을 예정이며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아동노동반대! 월드컵 캠페인

- 언제 : 6월 13일(목) 오후 3시
- 장소 : 수원소재 효원공원
- 문의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다산인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제73호

2002. 6. 18.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 여중생 사망

SOFA 개정으로 재판권 행사해서 책임자 처벌해야...

한국의 16강 진출을 눈앞에 두고 온 나라가 정신없던 13일 오전 10시 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에서 미2사단 44공병대(캠프 하우스) 소속 미군 장갑차(운전자 위키 마크 병장·36)가 앞서 가던 여중생 신효순(14·조양중 1년), 심미선(상동)양 두 명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차량의 소속부대가 몇 일전 미군 고압선으로 인해 사망한 고전동록씨 사건이 발생한 책임부대라는 점에서 더욱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신양 등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생일잔치에 가기 위해 갖길을 걸어가던 중이었고, 미군 장갑차의 오른쪽 궤도부분에 치여 장갑차가 몸을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다시 후진하여 시신이 많이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단체와 유족측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 전체 도로폭이 6.6m의 도로에서 너비를 합하면 도로폭을 훨씬 넘는 궤도차량과 전차를 교행(交行)시킨 점 △ 교행시 갖길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대형차량이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차 운행한 점 △ 대낮에 밝은 색 옷을 입은 2명의 피해 학생들을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 조사가 정지하라고 한 말을 차량내부가 시끄러워 운전자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여러 가지 의혹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유족측은 작전상 무리한 운행이 요구되지 않았는지, 운전자가 음주 또는 마약 등으로 인한 환각상태가 아니었는지 등 철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4일 이뤄진

현장조사에서 미군측은 운전자가 규정 에 따라 운행했으며 '피해자의 부주의'가 원인이라며 책임을 회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건은 공무중에 일어난 것으로 한국정부가 이의신청

집단 따돌림 지자체도 배상책임 있다

대전지법, D학교 학내 집단따돌림 사건 대전시에 책임 물어

공립학교내에서 집단 따돌림(일명 왕따)으로 특정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집단따돌림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부모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경우 가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 학부모, 학교, 자치단체 등이 연대적으로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철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D고교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을 하지 않는 한 재판관할권이 미군측에 있다는 소파협정의 규정에 의해 제대로 된 진상이나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군기지시설확장 반대와 우리땅되찾기 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김준기)는 21일 오후 8시 대책모임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산]

입은 이 모군의 가족이 대전시와 가해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지도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군이 교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게 됐다고 인정된다"며 "감독관청으로서 학교측의 과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자치단체인 대전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대전시는 피고인들과 연대(2면에서 계속)

< 제 3 회 다산인권포럼 >

"한총련 이적규정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반인권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굴레로 인해 5년여동안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수배와 구속의 악순환을 밟고 있는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지역에서 법률적, 실천적 접근을 통한 해법과 실천방도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록 한총련의 활동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총련 이적규정의 폭력성에 반대하는 모든 양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6월 28일(금) 오후 7시
- 장소 : 다산인권센터 회의실(수원지방법원 정문앞)
- 내용 : 한총련 이적규정의 법적, 실천적 대응을 중심으로
- 참석자 : 한총련 이적규정에 반대하는 분은 누구나
- 문의 : 031-213-2105 (노영란 상임활동가)

(1면에서 이어짐) 이군에게 6천1백70여만원 등 이군의 가족 4명에게 모두 7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군의 가족들은 지난 98년 초 D고교에 입학한 이군이 학우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문제제기하자 가해 학생 해당 학부모들까지 가세해 집단 따돌림을 했다는 것.

가족들은 이군이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일으켜 학교를 중단하는 등 전 가족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그 해 12월 가해학생 등에게 모두 2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법무법인 다산 손난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재판부에서 집단따돌림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해주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과 재판과정에서 겪은 한 가족의 고통이 이번 판결로 다시금 그 가족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집단 따돌림의 휴우증과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지법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학생인 이군의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교장 등 교직원 3명과 학부모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장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피해학생이 원래부터 정신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 학교의 집단 따돌림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피해학생의 일기장, 부적용 학생지도기록 등 개인 신상정보와 자료 등을 책자로 인쇄해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배포, 이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다산**

대입전형시 연소자 순 합격처리는 '차별행위'

국가인권위, 대구가톨릭대에 진정한 합격처리할 것을 권고

대학입학시험에서 연장자라는 이유로 불합격하는 일반적 관행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진정한 정모씨(25)가 대구가톨릭대를 피진정인으로 낸 '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차별행위'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모씨는 2002년 대구가톨릭대 의예과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진정인을 포함한 3명의 동점자가 발생하자 수능종합등급과 연소자 순으로 합격처리하여 연장자인 정씨가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정씨는 지난 2월 20일 대학입학시험에 있어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시험에서 탈락시킨 것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대학측은 연소자를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활용하는 일반적 기준이며 입시요강에도 명시한 것으로 응시자가 이미 용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 연소자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수능시험 성적, 생활기록부 성적, 면접고사, 경력, 학업계획서 평가 등 다양한 기준들을 우선 채택하고 있고, △ 같은 점수를 취득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길고 짧음이 지원자 능력의 우열이나 입학이후의 학업성취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 가능한 빠른 시기에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진정인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며, △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대학입시 뿐만아니라 일반직장의 취업영역에도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16일 경찰청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령안 중 조항이 정신질환자들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청에 삭제요청을 하여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인권위는 지난 11일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승인없이 최장 12시간동안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이메일을 열어 볼 수 있는 등 긴급감청을 허용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개정령안 제2조의 2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보통신부에 삭제·수정을 요청을 하여 검사가 긴급감청내용을 통제하도록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다산**

- 세계난민의 날 기념 워크숍 '한국의 난민정책, 이대로 좋은가'
 - 일시 : 2002년 6월 19일(수) 오후 2시 /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02-522-7284)
-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경기지역 대책위 건설을 위한 간담회
 - 일시 : 2002년 6월 21일(금) 오후 6시 / - 장소 : 다산인권센터 회의실 (031-213-2105)
- 미군기지신설확장 반대와 우리땅되찾기 경기도운동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 일시 : 2002년 6월 21일(금) 오후 8시 / - 장소 : 다산인권센터 회의실
- 아동노동착취 반대! 월드컵 캠페인
 - 일시 : 2002년 6월 21일(금) 오후 3시 / - 장소 : 수원역 광장

게시판



다산인권

제74호

2002. 6. 25.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한총련을 자유케 하라”

한총련 합법화 경기지역 대책위(준) 구성, 이적규정 철회운동 확산

경기지역에서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를 촉구하는 대책기구 구성이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6시 다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제단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경기지역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총, 범민련, 경인총련, 다산인권센터, 경기민연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실무책임자들은 지역에서 한총련 합법화 운동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한총련 합법화에 찬성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준비위원장에 박희영 목사(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를 추대하고 인권, 여성, 노동, 통일, 민주운동, 청년, 종교단체 등의 책임주체를 준비위원으로 하는 '(가칭)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한신대를 중심으로 경기지역 각 대학별로 한총련 대책위원회가 민주동문회와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준비위원회는 7월 발족 예정으로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조직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28일 오후 7시 다산인권센터가 주최하는 3회 인권포럼을 통해 한총련 문제를 지역사회에 공론화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한총련 학생들의 변론을 맡아왔던 박태현 변호사가 한총련 이적규정의 법적 문제점을 중

심으로, 서울 한총련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강위원 5기 한총련의장이 한총련 합법화운동의 의미와 실천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송원찬 활동가(다산인권센터)는 "한총련 합법화 운동은 한총련의 활동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 차원이 아니라 한총련 이적규정의

폭력성과 반인권성을 거부하는 양심선언 운동이다"라며 이적규정철회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지난 3월 발족한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만길외 7명)에 현재 2천여명이 대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0만 인 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이 대책위는 7월 20일에는 한총련 이적규정과 관련해 UN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며 이날 대규모 한총련 합법화 문화제를 개최해 한총련 문제를 이슈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붉은악마 신드롬의 이유있는 비판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월드컵 현상 냉철한 공론화 계기로

최근 한국의 월드컵 열기현상을 놓고 긍정일색 평가 분위기에서 한 인권단체가 비판하고 나서 월드컵 후에도 뜨거운 논쟁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 22일 인권운동사랑방(이하 사랑방)이 '붉은악마 현상은 국가주의와 맹목적 애국심'라고 비판한 논평을 발표하자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는 하루 수백건의 글이 올라오는 등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랑방은 '붉은악마를 부추기지 말라'는 논평에서 "빨간 티셔츠의 물결은 우

리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노동자·노점상의 생존권도 집회·시위의 자유도 순식간에 삼켜버렸다"며 "붉은악마 현상이 바야흐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응원 열기는 결코 자발적인 현상이 아닌 거대 매스컴에 의한 대중동원현상"이며 "체제에 대한 순응과 정치적 무관심, 인간의 주체성을 죽이는 군중심리가 있을 뿐, '붉은악마' 현상은 파시즘을 가능케 하는 병적인 현상"이라고 강력히 (2면에서 계속)

< 제 3 회 다산인권포럼 >

"한총련의 이적규정 이대로 들것인가"

- 일시 : 2002년 6월 28일(금) 오후 7시
- 장소 : 다산인권센터 회의실(수원지방법원 정문앞)
- 내용 : - 한총련 이적규정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박태현 변호사)
 - 한총련 합법화운동의 의미와 실천과제(강위원 5기 한총련의장)
- 참석자 : 한총련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분은 누구나
- 문의 : 031-213-2105 (송원찬 상임활동가)

(1면에서 이어짐) 비판했다.

또 '붉은악마' 현상을 두고 '레드 콤플렉스의 극복'이라느니, '6월항쟁에 나타난 민중 에너지의 재현'이라느니, 심지어는 '우리 민족의 단결력과 애국심'을 과시했다'는 일부 지식인들의 발언은 "추악한 아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논평 이후 사랑방의 홈페이지와 오마이뉴스 기사의견란은 네티즌의 찬반양론으로 월드컵 열기만큼 뜨거워지고 있다.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붉은악마가 누구의 꼭두각시인가"라고 논평 삭제제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 심모씨는 "고압선에 감전돼 사지를 찢리고 끝내 생을 마감한 전동록씨와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죽은 꽃다운 여중생 사건, 시그네틱스 아줌마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열흘이 넘게 단식하는 사건 등이 언론들이 월드컵을 이유로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논평의 긍정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민족의 에너지가 응집된 사건"이라느니, '국운 응성의 기세가 왔다느니'하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무안하기 그지없다"며 "브라질이, 아르헨티나가 축구를 못해서 지금 그렇게 나라꼴이 엉망이냐"며 일부 발언들을 지적했다.

하지만 논평에 찬성하는 네티즌들도 이 논평의 전체적인 맥락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논리적 비약과 신중치 못한 어휘 사용, 체계적인 논리 전개 부족 등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월드컵 기간내내 아동노동착취 반대 월드컵 캠페인을 통해 월드컵의 또 다른 이면을 알리려 애썼다"며 "하지만 우리도 이번 월드컵 현상에 대한 좀더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 논평으로 월드컵 현상에 대해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한 진지하고 냉철한 공론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네티즌들의 생산적인 논의를 요구했다.

한편, 사랑방은 내부적으로 이번 논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사랑방의 공식적인 답변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산**

인권의 '월드컵 열기' 제대로 보기

김삼석 (군사평론가/수원신문기자)

'월드컵거리우원'에 나선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거나 "한국을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다. 3.1 독립만세 뒤에 태극기가 대거 등장하기는 처음이라는 말도 있다. 분명 놀란 만한 일이다. 필자도 한때 감옥 안에서 금지하는(?) 축구를 하다 징벌방에 들어간 적이 있다. 구경하는 건 더 더욱 좋아한다. 하지만 지금의 월드컵 열기 이후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현재의 열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김수행 서울대 교수는 "입시경쟁, 취직경쟁, 세계 속의 무한경쟁, 성과급, 능력주의 등등으로 개인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졌다가 월드컵을 통해 다시 '우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다소 비판적으로 보는 뉴욕 길벗 교회의 김민웅 목사는 "열광의 뒤안길에는 역사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음을 그저 지나칠 수 없다...이러는 사이에 '6·10 항쟁 15돌'과 '6·15 남북공동성명 2돌'은 망각의 늪 속에 실종되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분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허딩크의 지도력에 대중들은 연일 탄복한다. 감탄하고 존경심을 표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월드컵 기간에 열린 6.13 선거에서 막상 우리들은 지역과 동네에서 한 사람의 대변자와 지도자를 뽑는 일을 철저히 외면했다. 진정한 '우리'가 되는 연습에는 서툰 걸까. 6.13 선거 날 오전 경기 양주군에서는 여중생 두 명이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깔려 처참하게 죽었다. 언론은 침묵했다. 축계에 방해가 되어서 일까. 여중생은 '누구'인가. 진정한 '우리'는 어디 있는 걸까.

98년 월드컵 결승전은 나이키가 미는 '프랑스'와 아디다스가 미는 '브라질'의 대결이었다. 그날의 우렁찬 열기를 뿜어냈던 광장은 지금 추억이 되었고, 축계의 이익은 피파와 세계적인 스포츠 업체가 이익을 나눠 가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축구는 냉엄한 현실의 이익이자 장사다. 피파노바 축구공을 꿰매는 일은 인도와 제3세계 어린이들이 5살 때부터 일당 130원에 하루 14~16시간 씩 일을 한다.

월드컵 4강에 오른 국가들을 살펴보면 독일은 서부독일이 흡수통일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다. 터어키는 세계 최고의 인권 침해국이다. 브라질은 국가경제가 부도난 상태다. 역사에 걸년도 주지 않는 이들의 결집과 열광은 그저 공허할 뿐이라는 것을 세계 4강이 잘 보여준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목청껏 소리 높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반가운 건 9월 6일 경평축구가 다시 부활하고, 혼쫓난 부시 정권이 18개월만에 구걸하다시피 북한과의 대화에 나섰다. 52년 전 6월의 한국전쟁을 비로서 끝내고 2003년에 진정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거리의 응원감이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역사는 축구공 사이로 비집고 나온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통~일조국'인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다. 엄연한 현실에서 굴러가는 축구공인 것이다. '통~일조국'이 되어야만이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세계 최강의 응원이다.

<미군전차 사망자 여중생 관련 규탄집회>

- 일시 : 6월 26일(수) 오후 4시

- 장소 : 미2사단 의정부 씨알씨 앞 - 경민대학 옆

다산인권

제75호

2002. 7. 2.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여중생 참사사건 공분확산

유족측, 미군에 형사고소 - 미군영내 진입기자 국가인권위에 진정

지난 6월13일 미군 부대의 장갑차에 압사된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사건이 전국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대책기구를 구성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고, 국회의원들도 성명을 내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6일 의정부 미2사단 정문 앞에서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범대위'를 구성하고, △부시 미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의 공개 사과 △유족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사건 관련자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행사 △신속한 시일 내에 유족에게 배상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효촌리 도로를 통과하는 미군훈련에 대한 금지 및 훈련장 폐쇄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범대위와 유족들은 대규모 집회를 갖고 미군측에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미군의 제지로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 중이던 인터넷 방송 '민중의 소리' 두 명의 기자가 미군측에 연행됐고, 500여명의 집회 참석자들도 미군측으로부터 물대포 세례를 받았다.

범대위는 지난 29일에도 미2사단 레드클라우드 부대 앞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갖고 미군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저지당하자 수 개의 계란을 던지며 항의표시를 했다.

이와함께 국회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 공동 대표인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

원은 2일 성명을 통해 미군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의원들은 '특히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미국에 형사재판권 포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 등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군의 공무집행방해 및 일반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전담조사반 설치 등을 요구했다

반면 미군측은 지난 19일 한·미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 △반대편 차로로 탱크가 지나갔는지 여

부 △여중생 두명을 사건 직전 봤는지 여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이 바뀌어 유족들은 조사 결과를 불신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7일 미군측에 연행된 두 기자가 "주한미군과 의정부경찰에 의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낸 사건과 관련, 당일 피해 당사자들과 의정부경찰서를 방문 긴급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유족들은 지난 2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미군책임자들을 의정부지청에 형사고소했다. 현재 고소대상자는 미2사단장, 공병여단장, 사고 차량 운전사와 함께 타고 있던 관제장교 등 모두 6명이다. 이와함께 유족들과 범국민대책위는 오는 5일까지 미군측에 서면으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라는 민원을 법무부에 접수했다. **다산**

'2002 교사를 위한 인권워크숍'(교사적무연수)

인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한 인권실천의 하나입니다. 생소하지만 무한한 인권이란 이름아래 소박하지만 커다란 꿈을 가진 교사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가지고 싶습니다. 인권적 감수성 가진 선생님. 그들이 희망입니다.

- 일시 : 2002년 7월 22일(월) ~ 26일(금)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일 동안, 30시간)
- 장소 : 수원소재 숙지중학교 내(화서역 앞)
- 대상자 : 중고등학교 교사 40명(선착순, 청소년단체 실무자 가능)
- 내용 : 인권의 이해, 인권교육 이론,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제 등
- 참가신청기간 : 7월 16일(일)까지
- 참가신청 : 홈페이지 www.rights.or.kr / FAX 031-215-4395
- 이메일 humandasan@hanmail.net
- 참가비 : 5만원(식사, 자료집 포함)
- 문의 : 박진 인권교육담당자(031-213-2105)